201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연간보고서

04
인사글
공감, 첫돌 기록

06
공감소개

07
공감 10장면

13
2013 공감의 활동

14 여성인권
18 장애인권
22 이주 · 난민
26 빈곤 · 복지
28 국제인권
32 취약노동
36 성소수자
40 공익법 일반
44 공익법 교육 · 중개

48
2013 한눈에 보는 공감

72
공감이 걸어온 길

80
공감 살림살이

82
2013
기부회원 인터뷰

86 별나고 특별한 기부이야기

87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안내

88 2013년 총 기부회원 목록

90
에필로그

공감, 첫돌 기록

"하늘은 욕망 없는 생명을 만들지 아니하고 대지는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아니한다." (天不生無慾之身 地不生無名之草) 굳이 고래의 명언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감하는 구절일 겁니다. 행여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공감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법의 세상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귀한 생명에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 주는 일, 그것이 법이고 인권의 몫일 겁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고통 아래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청년이 많은 나라라야 장래가 밝을 것입니다.

2012년 12월 공감이 탄생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익인권법재단입니다. 실체는 10년 전에 이미 태동했지만 외용을 다듬었습니다. 저간의 나름 소회를 묶어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라는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세월과 권력과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린 한 그루 나무가 되겠노라, 거듭 다짐합니다. 먼저 내딛은 선행주자의 책임 또한 무겁게 느낍니다. 새로운 법학교육 제도가 정착되면서 생산되는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기, 공감의 첫 해 기록을 펴냅니다. 나름 진지한 모색의 흔적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의 질책을 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는 공감이 되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안경환** 드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共感)은

2004년 1월,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모임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에서 출발한 단체로 2012년 12월, 아름다운재단 산하에서 분리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공감은 공익과 인권, 법 그리고 공감의 의미를 희망의 길 위에 새기며 그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지향

1.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및 인권의 경계 확장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2.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변화가 모색되는 다양한 지점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3.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실천을 '공익법 활동' 을 통해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공익법 활동' 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널리 퍼져, '법' 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쓰는 다양한 흐름이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 10장면

#01 다시 현장으로! –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사업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 은 2004년, 공감의 첫 공식 사업이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인권 현장의 외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빈곤, 취약노동, 장애인권, 이주 분야의 4개 단체와 법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빈곤분야에서는 '홈리스행동' 을, 취약 노동 분야에서는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를, 장애인권 분야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를, 이주 분야에서는 '지구인의 정류장' 을 선정하였습니다. 법률자문과 기획소송,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과 밀착하여 밀도 있는 법률지원이 가능했습니다. 2013년도 파견사업의 이야기는 각 영역의 활동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아내를 강제추행한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형사처벌을!

#02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중개업자가 의뢰인의 아내인 필리핀 여성을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소개로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가해자가 운영하는 필리핀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가해자로부터 3차례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필리핀 여성들을 '바디체킹' 했습니다. 결혼 알선의 한 과정으로서 필리핀 여성들의 상의와 하의를 속옷까지 탈의시킨 후 육안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공감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유죄 처벌을 받도록 필리핀 여성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바디체킹' 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국인 여성이었다면 말도 꺼내지 못했을 '바디체킹' 이 가능했던 건 중개업자가 가진 '권력' 때문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여성은 많은 반면, 기회는 부족하기에 결혼을 원하는 필리핀 여성은 중개업자의 바디체킹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법원의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결정

#03

지체 1급의 여성장애인이 평소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왔고,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이 미비하여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지하철공사에 해당 지하철역의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할 것과 환승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4년까지 해당 역사에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환승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 승소

#04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신청자에게 아무런 생계지원 없이 취업을 불허하면서 '불법취업' 을 이유로 난민신청자를 단속하고 구금한 사건에서, 공감은 난민신청자를 대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0월, "정부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없이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난민 지원 비정부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호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이를 빌미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05

공감은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홈리스 인권단체 '홈리스행동' 의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의 거리, 시설, 쪽방에 거주하는 홈리스 1대 1 면접 설문조사, 개별 심층 면접, 명의도용 피해 홈리스 법률상담과 후속지원, 현행 법령과 제도 분석, 외국 사례와 제도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고, 공감은 매주 1회 법률상담을 비롯해 실태조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명의도용 피해가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고, 2014년에는 홈리스 명의도용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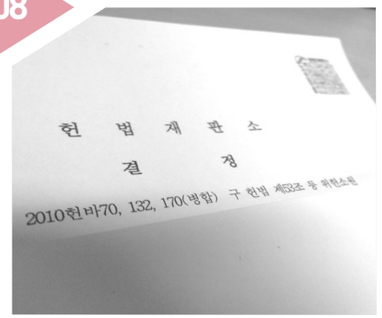
#06 성전환남성(FTM) 5명 성별정정 허가결정

공감은 건강상의 이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못한 성전환남성(FTM) 5명에 대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신청사건을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년 3월에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신청 사건은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SOGI)'가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을 완화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년 11월 성전환자 30명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면서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것은 성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수술에 따른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공감은 이주 관련 단체들과 함께 8개월 동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는 공간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관심 밖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규모의 실증적인 연구였고 이를 통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 개선 및 소송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08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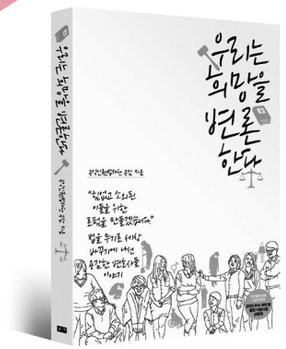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감이 대리한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을 부정 · 반대 ·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 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도록 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대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0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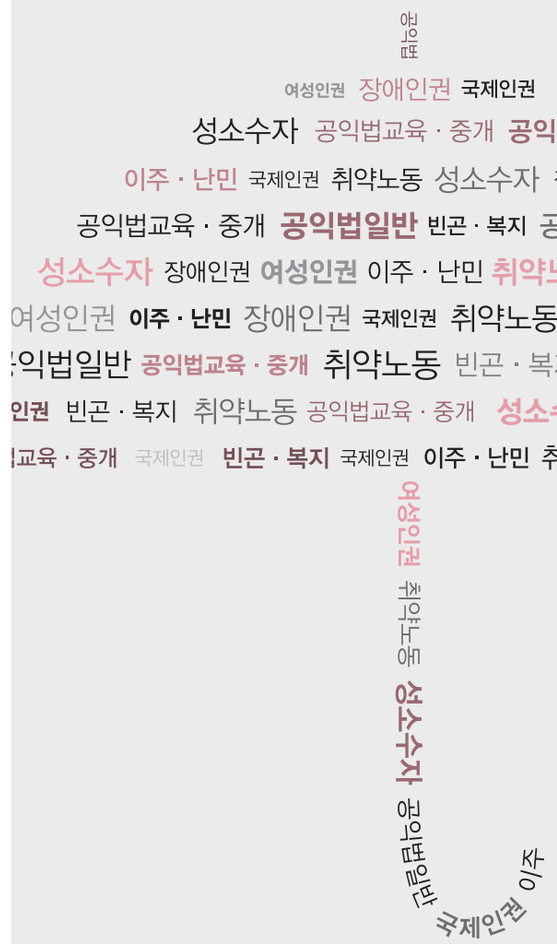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울타리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만 9년간 희망을 그려왔습니다. 공익과 인권을 위해 노력한 시간들은 작은 결실들을 맺었고,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1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이름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창립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홀로서기를 시작한 공감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발간



공감은 2013년 12월 지난 10년간의 활동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공감의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로펌을 자처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을 무기로 인권의 경계를 확장시켜 온 지난 10년 활동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뜨겁게 연대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때론 뭉클하고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이 책을 통해 나누고 싶었습니다. 공감이 미력하나마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오롯이 함께해 준 많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공감의 '희망을 위한 변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공감의 활동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 · 난민
빈곤 · 복지
국제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
공익법 일반
공익법 교육 · 중개

여성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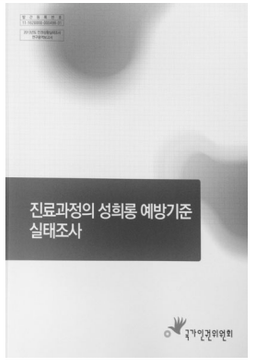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내 ·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자문 · 소송지원 · 법률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 · 복지증진 · 사회참여를 위한 법 · 제도 개선활동 및 연구조사 활동을 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

공감은 2010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준비한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6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감의 소라미, 차혜령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염전노예와 같은 인신매매부터 노동이주 조건을 속여 성착취에 이르는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널리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낙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열다

공감은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의 일원으로 낙태 유죄판결에 항소한 여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감은 2013년 11월 7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낙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첫 번째 연속포럼인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항목의 현실」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남성파트너가 낙태 고소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는 다수의 상담사례, 낙태처벌법 체계와 개정론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만드는 현행법이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 또는 임신 중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맥락을 정확히 담을 수 있도록 변론과 법제 개선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진료과정의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기준안 마련

공감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를 수행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과대안과 함께 구성된 연구진은, 의료기관 이용자와 의료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진찰 · 치료 ·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분쟁과 제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과정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후, 정부 · 구제기구 · 의료기관 · 의료인단체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방기준안(가이드라인)을 도출했습니다. 진료과정 성희롱에 관해서는 국내 최초인 이 연구를 기점으로 의료기관 이용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횡포, 강제추행으로까지

소라미 변호사

아니,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인가! 약 1년 전쯤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려는 필리핀 여성들을 상대로 위아래 속옷까지 탈의시키고 임신 출산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의 심정이었다. 당시 기사는 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고소한 후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필리핀 여성들의 사례가 드러나 가해자가 구속되었다고 전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공감으로 공익소송 신청이 들어왔다. 위 신문 기사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회유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했다. 자신의 아내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만이 재판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미성년 피해자도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그나마 사건이 유지되고 있었다.
중개업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피해자 부부만이 홀로 남아 싸우고 있었다. 본인들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낀 부부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오랫동안 국제결혼 중개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의한 피해 문제에 주목해왔던 공감은 바로 사건을 맡았다.

가해자는 대전지역에 근거를 두고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중개업자였다. 물론 한국인이다.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은 2011년 가해자의 소개로 필리핀 현지에서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피해 여성은 관행대로 비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운영하는 필리핀 숙소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가해자에 의해 3차례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안마를 하게 하던 중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두 번째는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게 남편이 맡겨 놓고 간 용돈을 달라고 하니 자신에게 뽀뽀를 하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세 번째는 늦은 밤, 숙소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을 했다.
피해자 부부와 함께 끝까지 처벌을 원했던 또 다른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필리핀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도착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끝나고 말았다. 남은 사건에 대해 가해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

가해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심지어 필리핀 현지에 있는 피해자 가족까지 접촉해 사건 중단을 회유했다. 결국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가해자의 소개로 결혼했다는 수십 명의 한국 – 필리핀 국제결혼 커플들은 가해자 덕분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가 가해자가 운영 관리하는 필리핀 현지의 숙소이다 보니 추가로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제추행 당일 피해자와 같은 방에 머물렀던 필리핀 여성과 연락이 닿은 것이었다.
피해 여성과 증인으로 출석한 필리핀 여성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임신과 출산 여부를 검사하고자 했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필리핀 여성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반문이 법정을 맴돌았다.

2013년 11월 7일,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워낙 극렬히 다투었기에 맘 졸이고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알몸 신체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일단 피해 당사자가 알몸 검사에 동의했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동의가 있었다면 '강제' 추행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아쉬운 점은 '위력'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결혼 전과 후로 나누어 위력 여부를 판단했다. 결혼 후 가해자의 숙소에서 한국 입국을 대기하는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지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실력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고 보았다. 반면 결혼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알몸 검사 시에는 가해자에게 '위력'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치 않으면 다른 중개업자를 찾아가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결혼 중개 구조의 문제점을 간과한 결정이다.
표면상으로는 필리핀 여성, 중개업자, 한국인 남성은 모두 결혼 맞선의 계약 당사자로 보인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인 남성 수보다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필리핀 여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필리핀 여성은 선택을 당하는 지위이다. 중개 수수료 부담도 한국인만이 한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원하는 필리핀 여성에게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한국인 남성과의 맞선, 성혼, 한국으로 가는 키를 쥔 자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을 원하는 필리핀 여성은 중개업자의 알몸 검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가해자는 필리핀 여성의 이러한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다. 그 결과 강제추행, 강간 피해를 호소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 판결로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이주여성들에게 알몸 신체검사를 요구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파될 것이 우려스럽다.

장애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문과 소송지원 및 법률교육,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 · 제도 개선활동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차별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 국무부 주관 장애인단체 교환연수 프로그램 참가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는 장애인단체 교환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전세계 19개국에서 온 장애인 단체활동가들과 교류하고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인권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RICV(Resources for Independence Central Valley)와 파트너가 되어 장애인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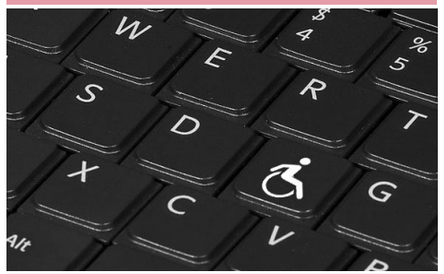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의 손해배상 인정

충남 모 지역에서 한 지적장애 3급인 50대 남성이 19세 때 농장주에게 보내져 37년간을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또한 농장주는 축사 옆의 너무나 열악한 임시 건물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해결해 준 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시켰음에도 가족 같은 사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감은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농장주 부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기 사례회의

공감의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정기 사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을 수탁받아 전국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장애인차별사례를 상담받고, 필요한 법률자문이나 그밖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의뢰된 사건에 관해 사례회의를 통해 개별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 차별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차별구제소송 승소



국내 유수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들처럼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여 차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공감은 시각장애인들을 대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 피고 대한항공사를 상대로 장애가 없는 이들과 동등한 전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갖출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2014년 11월까지 대한항공사 홈페이지를 변경하여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장애인 차별구제청구, 법원에서 인정받다!

염형국 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구제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결정 2건이 나왔다. 모두 공감이 담당해서 진행했던 사건이다. 한 건은 지체 1급의 여성장애인이 평소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왔고,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이 미비하여 큰 불편을 겪었던 사건이다.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지하철공사에 해당 지하철역의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 통로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그동안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다른 한 건은 우리나라 유수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들처럼 대한항공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해 차별을 당했던 사건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원고가 되어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피고 대한항공사를 상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원고가 되어 장애가 없는 이들과 동등한 전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갖출 것을 청구함과 아울러 차별적 조치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기존에는 장애인 차별에 관해 장애를 이유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는 직접차별만을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 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나 조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로 규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 기존처럼 차별피해를 받은 장애인 당사자가 금전적인 배상만을 받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실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차별에 대한 금전배상이 아닌 차별 자체를 시정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구제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 등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장치로 마련된 법원에 의한 적극적 시정조치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다른 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진일보한 규정이다. 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원의 의지에 따라 장애인차별의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할지 여부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법원이 시정조치를 명한 판결이 단 1건도 없었다.

장애인 차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이 차별행위이고 무엇이 편의제공의 문제인지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가 지체장애여성인데 지하철역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면, 술 취한 남성이나 노숙자가 장애인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휠체어에 앉아 소변을 지린 경험을 한다면, 직장에 가야 하는데 지하철역 환승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그러한 비참함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보조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공중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한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다면,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후보자의 기호를 알 수 없다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실은 이러한 비참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자적인 존재가치를 부정당하여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 다름 아니다.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비장애인 화장실과 같이 남녀로 분리 설치하는 것,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웹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는 것은 현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만 하는 차별적 현실이다.

법원은 위 2개 사건을 각각 심리하다가 조정에 회부하였다. 지하철 역사 접근권 차별사건에서 법원은 2014년까지 해당 역사에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환승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조정결정 하였다. 한편 대한항공 웹 접근권 차별사건에서 법원은 2014년 11월까지 대한항공사 홈페이지를 변경하여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판결로 선고받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하여 적극적 시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부디 장애인들이 사회 곳곳을 누비고,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이주 · 난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 · 보호 · 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교육, 대한변협과 공동 주최

공감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주 관련 법률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법률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은 이주노동, 출입국, 국적 · 영주권과 관련된 다년간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의 후원으로 일본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일본 법제 · 판례와의 비교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 파견활동

공감은 2013년 5월부터 안산에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건이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위반, 열악한 숙소와 부족한 휴게시간,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 등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례 개입, 국회 토론 및 법안 마련

공감은 추방된 몽골인 학생의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와 유엔 이주민권리 특별보고관에 진정을 제기하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인권포럼 등과 공동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와 법무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마련을 주도하며 이주아동의 체류, 교육, 건강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국경(국적)과 인권의 경계

박영아 변호사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공권력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폭정이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권력분립제 하에서 공권력 행사가 법의 한계를 넘어섰는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처음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이 중요한 이유이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유,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원칙들이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출입국관리 영역이다.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법심사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이 문제된다. 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어버리면 방법이 없다.

2014년 1월 초, 2013년 가을부터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베트남인 선원을 만났다. 그는 2013년 6월 입국한 후 2달 2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배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하루 5-6시간 잠을 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 일을 했고,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에도 어구 손질과 출항 준비로 휴일 없이 일했다. 그러나 그가 견디지 못했던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배가 바다로 나가기만 하면 시작된 한국 선원들의 폭행, 임금체불 그리고 선상에서 받았던 차별이었다. 그는 첫 월급을 두 달 넘게 받지 못했다. 반면 한국 선원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마다 보수를 받았다. 그는 20년 넘게 배를 탄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원들의 "밥"이었다. 그에게 매일 날아든 것은 욕, 발과 주먹, 생선과 생선통 등이었다. 반격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까봐서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 했다. 그는 선장, 선주, 수협, 관리업체 등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나아진 것은 없었다. 결국 업체 변경을 요구하며 승선을 거부했다. 그러자 선주는 이탈 신고를 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선주가 이탈 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폭행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선주는 이탈 신고 철회 조건으로 '3년 근무 조건, 법무부 벌금 본인 부담, 이탈 기간 월급 없음, 불평 · 불만 없이 성실근무, 이탈시 송출회사에서 책임(하선 포함)' 을 요구하였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선주의 이탈 신고가 있고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다른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관리업체 직원과 사장의 안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갔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업체 변경 허가가 아닌 강제퇴거 명령서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구금되었다. 결국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주의 이탈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베트남 송출회사에 12,0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하느라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은 상태여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감은 그를 대리해서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며칠 후 법원에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기도 전에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설명은 베트남 정부가 1월 11일 이후부터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남아 있는 자국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자진해서 출국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설사 베트남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출국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선주의 이탈 신고만으로 항변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되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출입국관리가 주권의 영역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은 분명 법, 원칙과 기준이 있고 재량의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관계와 이해관계를 맺은 외국인을 강제로 송환시키는 처분이 형벌에 비견될 만큼 가혹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체류관리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체류자격취소,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관련된 어떤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법원의 판단은 법무부 지침에 구속되지 않지만, 법원까지 가는 사안이 많지 않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구금이 되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에 있어서 만큼은 공권력의 행사가 폭정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빈곤 · 복지

홈리스, 도시 빈민 등 빈곤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법 · 제도 개선연구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단체에 법률지원, 법률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 실태조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정기 법률상담

공감의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홈리스행동'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정기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법률상담을 통해서 거리,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여러 공간과 상황의 '홈리스' 상태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했습니다. 공감은 법률상담 이후 소송지원이나 법률자문을, 홈리스행동은 공감과 함께 상담 사례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신청이나 주거,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맡아 법률상담을 위한 방문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개월간 23회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총 52명의 홈리스 당사자들을 지원하였고, 그 후에도 이어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를 범죄자로 몰지 말라

차혜령 변호사

2013년 가을, 서울에서는, '홈리스'라는 존재의 징표를 '범죄'의 지표로 삼는 경찰의 표적 불심검문이 횡행하고 있다.

9월 4일 발생한 사건은 이러하다. 한 교회가 매주 하루를 정하여 홈리스들 백여 명에게 1인당 구제금 500원을 나누어 주는데, 교회는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서 구제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였고, 옆에 있던 사복경찰은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용 휴대용 단말기에 바로 입력해서 신원조회를 했다. 경찰의 신원조회는 홈리스들이 범죄 혐의로 수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금을 받으려는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집단검문을 실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홈리스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 것에 항의하는 표시로 주민등록번호를 연속된 같은 숫자로 적자, 사복경찰은 정복을 입은 경찰에게 당사자를 인계하고 다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당사자는 힘줄이 끊어지고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거쳐 1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뿐만 아니다. 홈리스들이 모이는 급식소, 서울역 광장, 지하철 역사 출구,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경찰은 홈리스들을 특정하여 수시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표적 불심검문 경험이 있는 홈리스들 중 경찰 신분이나 검문 이유를 들은 분들은 거의 없다. 어떤 분은 하루에 세 차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말한다. 거리에서 자다가 불심검문을 받은 분은 '도둑질도 못해서 노숙자로 남았는데 어이없고, 너무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홈리스라고 무조건 범죄자라로 몰고 보는 불심검문,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는 불심검문을, 경찰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국제인권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및 외국법 연구조사, 유엔인권시스템의 활용, 국제적인 공익변호사 네트워크의 강화 및 공동활동,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한 직 · 간접적인 개입 등의 활동을 합니다. 특히 실천적인 연구조사와 관련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단체들과 활동하고 국내 · 외적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공감은 다년간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대응해온 해외한국기업 감시 네트워크의 구성단체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한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여 관련 한국 기관, 단체, 필리핀 현지 정부기관, 기업, 노조, 단체 등을 면담하고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침해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의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기업과 인권 영역의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난민법제 개선운동 소개 및 자문

공감은 국제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에 정식 초청되어 이스라엘, 이집트 참가자들과 더불어 '난민인정시스템'을 발표하고,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가 주최한 회의에서는 난민관련 소송전략, 인종주의의 현황과 대응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난민변호사네트워크 주최 한일변호사 난민법 전략회의에 국내 난민네트워크 단체들과 함께 참여하여 일본의 난민법 제정운동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협 심포지엄에서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제시

공감은 대한변협이 매년 주최하는 유엔인권권고 이행점검 심포지엄에서 2012년에는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방안'을, 2013년에는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발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 국내적으로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 분야에 대하여,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국회가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 이행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그 역할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무차별적인 최루탄의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바레인에 대한 최루탄 수출 저지

바레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진압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최루탄으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감은 바레인 정부에 가장 많은 최루탄을 수출한 기업이 한국 기업임을 확인하고, 관련 국내단체들과 함께 최루탄 바레인 수출 대응모임을 구성하고 외국단체들과 연계하여 온라인 행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진정의 의의를 소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수출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필리핀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다!

- 9박 10일간의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실태조사 -

김 진 공감 연구원(뉴질랜드 변호사)

수년간 해외한국기업감시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해온 공감은 올해 이 네트워크의 제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로 현직 교수, 변호사,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기존의 현지 조사 보고서, 언론보도, 제보, 인터넷 자료 등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사전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해외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현지의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진은 세 팀으로 나뉘어 세 국가를 선정, 방문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즈베키스탄, 버마, 그리고 필리핀의 세 지역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은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좋은기업센터의 유 정 팀장님과 함께 8월 7일, 9박 10일간 필리핀 실태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기업 진출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진출해 있는 기업의 수가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의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단체들이 있어 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 중에도 현지 일정을 코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닐라에 위치한 노조 단체인 CTUHR(Center for Trade Union and Human Rights)와 카비테에 위치한 WAC(Workers' Association Center)의 도움으로 현지의 많은 노동자와 단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의 중립성을 지키고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기업과 기업 관련 공공기관, 현지의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간적, 금전적 이유로 짧은 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현지 조사이다보니 마음이 급해 9박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약 40개 단체 및 기관을 만나는 폭풍 같은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간은 현지의 다양한 노조와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으며, 현지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과거 우리나라 ODA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거권 등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한 취약 계층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처한 현실을 조사했습니다.

노동자들 외에 현지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선주민청 등 공무원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한국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현지 변호사들과 노동 전문 교수들을 만나 필리핀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 및 현지에서 적용하는 다국적기업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더불어 카비테, 수빅 등 경제 특구 지역의 지역 담당자 등의 실무자와 시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입안 시 직접 반영되는 사항 및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인들을 만나 가톨릭계에서는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현지 한국 기업 자문가, 하청기업, 현지에 진출해있는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만나 사용자 측의 입장에 대해 정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개별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진행되는 다목적 댐 사업에 있어 선주민들과의 짧은 간담회와 해당 시의 시장, 선주민 대표, 지원 단체, 집행 공무원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댐이 건설되면 마을 일부가 수몰되어 선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잃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낼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문제를 파악해,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은 필리핀 내 한국 기업의 현황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으나 하루 평균 4~5개 회의로 이루어진 강행군을 통해 필리핀에서도 역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위험물질 취급 업체의 공정안전관리, 기업의 노동자 노조 결성 방해, 한국 기업 하청 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과 비교한 한국 기업의 특징에 대한 질문에 있어 '신체적 폭력과 인신공격'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연구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노동자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고, 이에 필리핀 내 많은 한국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여 실제 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전문가, 실무자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버마와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다른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사례 비교 등을 통해 해외 한국기업의 원활하고 올바른 활동을 돕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대안 제시 및 관련 교육 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취약노동

법 · 제도 개선활동, 소송 및 자문, 연구조사, 교육 등을 통해 소외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주노동자, 청소년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

케이블방송 노동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에 케이블방송 노동자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측에 대항해 오고 있습니다.
공감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방송비정규직노동조합에 파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파견 사업을 통해 노동조합과 정기적으로 대책 회의를 논의하고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

가사사용인, 요양보호사, 간병인과 같은 돌봄노동은 중고령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입니다. 돌봄노동의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공감은 요양보호사노동조합에 대한 파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사사용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실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자문을 하고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학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활동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또는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통해 노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입법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만나서 실태 조사를 하고 상담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현대판 인신매매, 간접고용노동자

윤지영 변호사

인신매매(人身賣買). 말 그대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판다' 이 단어가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사라졌다. 아주 가끔 성 착취 목적의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나 장기매매를 이유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도시괴담 수준의 이야기만 오르내릴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있다. 너무 흔하고 많아서 인신매매인지조차 모르는 무감각 상태에 있을 뿐이다. 현대판 인신매매, 간접고용이 바로 그것이다.

간접고용이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간의 인신에 대한 거래로, 사용자가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 업무위탁, 노무도급, 사내하청, 외주/분사, 근로자공급 등 용어는 다양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지면서도 형식적으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에 간접고용의 특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고 규정한다. 직업안정법 역시 제정 당시에는 유료직업소개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유료직업소개업이 가능하도록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고 1997년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간접고용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는 보통 1년 또는 2년의 기간을 특정하여 업무위탁, 도급, 파견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 기간도 1년, 2년의 단기로 정해진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고용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인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바로 다음 날 홍익대학교가 청소경비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실업 상태에 놓인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사업주인 청소경비 용역업체가 이들에게 다른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부터 홍익대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 오다가 홍익대학교가 청소경비 업무를 아웃소싱/외주화하면서 졸지에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둔갑했다. 즉 이들은 줄곧 홍익대학교에서 일해 왔지만 고용사업주는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줄 능력도, 의사도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렵다. 홍익대학교 사례에서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버린다. 다행히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서 노동조합 설립이 무사히 끝나더라도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용사업주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과 투쟁은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곳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사용사업주는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업장 안에서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경우가 많다. GM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법적으로 그 공간은 GM대우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다.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간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고용사업주는 더 낮은 단가와 조건으로 사용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윤의 감소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또한, 직접고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중간에서 이윤을 챙기는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일례로 2007년 동산병원이 환자식 조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직접고용했을 때 직원들의 임금은 월 107만 원이었으나, 2010년 5월 동산병원이 환자식 조리업무를 풀무원(주)ECMD에 아웃소싱하고 파견업체 유니토스를 통해 노동자를 공급받게 된 이후 환자식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임금은 월 89만 원으로 떨어졌다.
간접고용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산재 사고를 당했을 때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되고 구제 가능성도 낮아진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한 학생이 '호텔○○' 이라는 인터넷 정보제공업체를 통해 ○○호텔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호텔과 호텔○○에 임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호텔과 호텔○○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이 학생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들에게 간접고용은 아주 매력적이다. 유연하고 자유롭게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노동자들에게 간접고용은 착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와 차별과 무시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힘들게 한다. 파견사업을 통해 만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를 말해준다. "우리들이 당신들의 이윤과 영리를 위해 움직이는 기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세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하다. 더 늦기 전에 간접고용을 없애고 직접고용을 확립해야 한다. 바로 노동관계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 뿌리 깊은 편견과 일상적인 차별로 인하여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며,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감은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제개선 및 일상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쉬워 더 취약합니다. 공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과 〈성소수자 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고,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과 함께 유네스코 해설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을 공동 번역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한국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변론

대법원은 2013년 7월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학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폭력에 처해진 소수자학생의 취약성, 집단따돌림의 유형인 정신적, 심리적 공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공감은 파기환송심에서 학생의 부모를 대리하여 자살예방전문가에게 심리적 부검을 의뢰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연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산고등법원은 2014년 2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학교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책임만 인정하였습니다.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공동주최 및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발족

2013년 9월,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의 '당연한 결혼식' 이후에 동성결합 인정과 관련된 소송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최하여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동성 커플들은 그동안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관계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겪어 왔습니다. 공감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혼인의 자유와 평등, 동성결합에 관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LGBT 청소년에게 학교란

-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을 변론하며 -

장서연 변호사

2009년, 학교 안에서 오랫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해 온 고등학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나이가 15세에 불과했습니다. 남자고등학교에서 목소리가 가늘고 여성스럽게 행동한다고 놀림을 당하고,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나서 '걸레년', '뚱녀'라는 욕설을 듣고, 다른 학생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김신(주심)]은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하여 학교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폭력에 처해진 소수자 학생의 취약성, 집단따돌림의 유형인 정신적, 심리적 공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학교의 역할을 너무 소홀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집단 괴롭힘이 악질적인 이유는, 한 집단의 소속원 중에서 자기보다 약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상대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신체적 · 심리적인 공격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는 우발적 폭행과는 질적으로 다른 중대한 정신적 손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LGBT)들은 학교에서 가해지는 집단 괴롭힘에 더 취약합니다.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동성애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이라고 하는데, 여러 연구결과 LGBT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보다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LGBT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울, 불안, 자신감 상실, 위축, 사회적 고립, 죄의식,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고, 자해나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 조사를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자나 여자 같다고 놀림받은 적이 있다'는 청소년은 78.3%, '아웃팅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30.4%, '동성애자라고 알려진 후 학교,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1.4%, 또한 욕설 등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51.5%,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당한 적 있다'는 청소년은 22.3%에 달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에서 2012년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서울시 청소년 등 2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학교에서 성적 지향(동성애 등) 또는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등)으로 인한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심하다' 또는 '심하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120명(54.3%)으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단 괴롭힘에 취약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교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LGBT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듣는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고,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차별과 괴롭힘을 당해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학생이 당한 괴롭힘은 전형적인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사소한 행동에도 성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는 피해 학생의 예민함과 여성스러운 행동에 원인을 두고 피해 학생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피해 학생이 당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학교 차원에서 전학을 권유하는 외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은 여전히 "집단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태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호감을 얻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학교 측은 여전히 소수자 학생의 취약성이나 집단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학교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성 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무지와 편견, 잔인함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자살하기 3일 전에 남긴 글입니다. 한국사회가 여전히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교시를 그냥 보냈습니다. 처음에 저도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었는데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만 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참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서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를 나가서 먼저 한 것은 길거리에서 몇 분 정도 울다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저는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례로 오시고 저는 또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음 주부터 올라오셔서 상담하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끝내 저는 이기적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익법 일반

공감은 우리사회 건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한 활동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 그리고 불합리한 법률위반 사건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개정안 발의

시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기부금품법 연구모임을 꾸려, 공감에서도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에 관해 연구와 논의를 계속하여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공감은 민간의 자율적인 봉사와 자발적인 모금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활동할 것입니다.

탈북자 합동신문 인신구제청구

공감은 지난 2013년 4월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 의해 반 년 가까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 모 씨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유 모 씨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중국 화교임이 밝혀져 구금의 필요성이 사라졌는데도 영사 접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반 년 가까이 구금을 지속하였습니다. 다행히 유모씨는 변론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심판청구

지난 2013년 5월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으로 기획한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공감이 대리한 이번 기획 소송은, 2010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생매장 등 비인도적인 처분으로 수만 마리의 무고한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무려 1,12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 (청운 · 효자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무죄 선고

공감은 '청운 ·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소속 활동가 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청와대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옥외집회 허용 장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국의 관타나모, 합동신문센터를 고발한다

황필규 변호사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독방에 감금되어 조사받지만 당신에게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없다.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도 하지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당신은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 길이 없다. 조사 중 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아무도 당신의 이러한 처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은 길게는 반년, 아니 그 이상까지 이러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조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이가 누구인지,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전쟁포로에 대한 취급도 비상계엄하의 체포 · 구금에 대한 특별 조치도 이럴 수는 없다. 관타나모인가. 아니다. 적어도 관타나모에는 누가 있는지가 알려져 있고 변호인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곳은 '법치국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 다."

대부분 국민이 합동신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의 입장이 전부다. 합동신문과정에서 간첩을 적발했다, 아니면 적발하지 못했으므로 합동신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런가보다 생각한다. 으레 간첩 잡는 곳이겠거니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자들은 외국 주재 한국 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하고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입국 후에는 국정원의 주도하에 탈북자 여부,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합동신문이 이루어지고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게 된다. 합동신문은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상 무기한도 가능하다. 하나원 과정은 3개월 정도 진행된다. 거의 1년 가까이 탈북자들을 출입은 물론 외부접촉도 철저하게 통제하며 감금할 수 있는 이러한 관행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일까.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합동신문의 법률적 근거의 전부다. 그리고 시행령이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 로 부연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 · 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 등' 은 국정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6개월씩이나 독방구금하면서 그 어떠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간첩죄에 관한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합동신문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문제는 법령에 드러나지 않은 배경, 즉 보호신청을 한 탈북자 중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고려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다.

법원은 탈북자들이 임시보호시설 수용 및 조사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았고 이를 양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조사실에 수용한 후 탈북자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사실대로 말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등을 받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법원은 탈북자들이 스스로 보호신청을 한 것이고 언제든지 보호신청을 철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보호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 국정원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했을까.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인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중국으로의 밀입국? 아니면 합동신문시설을 나와 한국에서 한국 국적자로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한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법원은 탈북자들에 대한 절차 보장 없는 감금조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 였다고 한다. 흉악범이나 지능범이 증가한다고 하여 고문의 도입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장 간첩 적발의 필요성이 행정절차에 불과한 보호 여부 심사절차에서 간첩혐의 수사를 하는 위법적인 관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행정절차인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와 형사 절차인 간첩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절차가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할 때 법치주의는 확립될 수 있다.

절차보장이 전무한 장기간의 강제구금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기본적 진료나 운동 등의 보장도 생각하기 어렵고, 모욕적 언사나 폭행 등이 이루어질 위험성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탈북자들의 경우 항상 당국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잘 길들여진 지극히 순종적인 '이등 국민' 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일까. 여러 탈북자들이 합동신문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당국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장기간 감금상태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현행 합동신문에서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면 누가 과연 자살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탈북자에 대한 합동신문과 하나원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도 언젠가는 시정될 것이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탈북자라도 하루빨리 이러한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극단적인 국가폭력일 수 있는 현행 합동신문의 관행, 이제는 그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공익법 교육 · 중개

공감은 법조인, 예비법조인, 학생 등의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 중개하고,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법 활동을 활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턴쉽 제도와 인권법 캠프 등을 진행하며, 로펌이나 법조인이 공감의 활동에 재정지원 또는 직접 참여하도록 하거나 공익단체를 중개하여 공익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공감은 2013년에도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3회에 걸쳐 열었습니다. 1차 모임에선 일선 공익변호사들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2차 모임에선 예비 공익변호사의 진로 모색 발표가 있었으며, 3차 모임에선 공익변호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감 외에 다양한 공익변호사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공감 인턴십 제도

공감은 매년 2회 정시 자원활동가를 선발하고 비정기적으로 수시 자원활동가를 선발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1기 자원활동가부터 2013년 제18기 자원활동가까지 40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공감과 함께하였습니다. 공감 정시 자원활동가는 국내 · 외 법률문헌조사, 홍보, 운영의 4개 영역으로 선발되어 6개월 간 200시간 이상 담당 구성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공감 17기 자원활동가 강동경 김덕현 김예슬 김지홍 봉황 설정은 송민주 이준석 임규원 임상옥 임석민 장현진 조윤현 조현찬 한영동 한예솔 황영호
* 공감 18기 자원활동가 강병헌 권영실 김지연 남지윤 박상희 양지희 오신영 이가영 이경은 이정화 이정효 이혜윤 정소망 정은정 정의선 조미연 조연희 하준영 하태승

공감 인권법 캠프

공감은 매년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공감 인권법 캠프를 개최하여 공익 인권법에 관심 있는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법 활동에 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2013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공감 인권법 캠프에는 예비법조인 60명이, 2013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동안 열린 여름인권법캠프에는 61명의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하여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감 객원연구원 제도

공감은 국내 · 외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객원연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년의 기간동안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객원연구원들은 안정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감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김정혜 객원연구원, 김 진 객원연구원, 나영정 객원연구원, 임자운 객원연구원이 공감에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로스쿨 실무수습

공감은 국내 로스쿨 21곳, 호주 로스쿨 1곳과 실무수습협약을 체결하여 방학 중 해당학교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동계 실무수습(1/7~1/17)에 10명이, 하계 실무수습(7/8~7/19)에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감 월례포럼

공감에서는 매월 자원활동가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6회의 월례포럼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주제를 함께 바라보고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월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소모뚜(버마이주민, 인권활동가)
5월 성희롱, 왜 문제인가? –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6월 경제위기 시기, 건강권 어떻게 지켜야 할까?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7월 탈시설 문제와 대안
– 김탄진, 장애경(탈시설 당사자), 임소연(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10월 쌍용차 사태 24명의 죽음, 끝나지 않은 이야기
– 한상균(전 금속노조 쌍용차노조 지부장)
11월 영화 '로빈슨 주교의 두가지 사랑' 단체 관람 및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과의 대화

공감에서의 1년

김 진 공감 연구원(뉴질랜드 변호사)

2014년 3월, 공감과 정식으로 연을 맺은 지 일년이 지났다.

공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때였다. 당시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불허판정을 받은 한 난민신청인이 상담을 하러 와서 "이런 일은 공감 변호사들이 잘 봐준다더라. 공감과 연결해달라" 고 요청을 했다. 몇 개월간 상담을 하면서 특정 단체를 언급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조금은 걱정하며 공감에 연락했더니 매우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이후 난민 관련 일을 하며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의 논문을 접했고, 우연한 기회에 염형국 변호사님을 뵈며 내게 공감에 대한 이미지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 이었다.

2012년 12월에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외국 변호사로 한국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공익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일이 정말로 내가 원하던 일이었는지, 어찌 보면 이미 예전에 끝냈어야 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공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더 다양한 분야를 보며 더 고민해 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공감에서의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다양한 분야를 보며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자마자 9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합창 연습을 했던 것부터 바로 며칠 전 25차 유엔인권이사회 구두의견서 발표를 위해 제네바 출장을 갔던 것까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 동안의 활동 중 작년 8월, 해외의 한국기업 감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리핀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이왕 필리핀까지 간 것 되도록이면 많은 기업과 단체를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열흘간 40번 이상, 하루 평균 4번 이상의 미팅을 갖고, 돌아오는 날 비행기 타기 전까지 단체 방문을 하려고 보니 진이 빠지고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막상 보고서를 쓰려니 조금 더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또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준비를 위한 '공변 모임' 도 기억에 남는다. 준비 끝에 성공리에 끝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을 보면서 후배 예비 공익변호사들의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선배 변호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예비 외국 변호사의 진로에 대해서도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난민 단체와 함께 만들어간 난민의 날 행사, 이주민 지원 단체들과 함께한 이주 인권 포럼 등, 공감과 함께 하며 많은 단체를 알게 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언젠가 존경하는 분께서 "하루하루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여전히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고 공익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지 자신은 없지만 공감 활동 중 친해진 사람들로부터 언제부턴가 좋아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방황하는 가운데 나름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공감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한눈에 보는 공감

1 JANUARY

여성인권*

- 교수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관련사건 항소심 변론
- 구세군 미혼모자립시설 의뢰 청소년 자립 미혼모 가정의 어린이집 화상 사건 자문
- 다문화 교재 출판을 위한 이주여성인권포럼 회의
- 이주여성의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 인신매매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남윤인순 의원실 면담
- 성매매 기소유예 전과의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연장 신청을 위한 의견서 작성

장애인권*

- 거주장애인 욕구조사 및 자립생활지원방안 연구
- 장애인 참정권 소송 회의
- 탈시설정책위원회 워크숍
-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미비 차별구제소송 변론
- 시각장애인 볼라드(자동차 진입 방지봉) 피해구제소송 준비회의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재단 대책회의
- 장애인권리협약 교환연수프로그램 관련 미 대사관 회의

이주 · 난민*

- 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 촉구를 위한 대책연대 회의, 국가인권위 조사관 면담, 유엔 특별 보고관 진정 기자회견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 제도 개선 회의
-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박영선 의원실 면담
- 이주공동행동 사업계획수립 워크숍 참여
- 사업장 변경허가 신청 해태 손해배상청구소송 내용증명서 발송
- 스리랑카인 I 난민불허처분취소 당사자면담 · 즉시항고장 제출
- 버마인 K 난민불허처분이의신청 당사자 면담
- 버마인 A 난민인정신청 면담조사 참관
- 대한변협난민법률지원위원회 회의 · 난민법 커뮤니티 스터디 강의
- 난민네트워크 회의

빈곤 · 복지*

- 홈리스행동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 보건복지부 주최 입양 관계 기관 연찬회 참석
- 입양관련단체 입양특례법 간담회
- 입양관련단체 입양특례법 국회 기자회견

취약계층노동*

- 한일 여성노동 포럼 '한일 임금차별 사건 판례의 동향과 평가'
- 택시기사 사납금 강요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시법 위반 사건 변호
-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정책자문회의
- 희망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관련 대응회의
- 김춘진 의원실 가사노동법안 검토 간담회
- 현장실습생 문제 해결 관련 장하나 의원실 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기회의
- 기륭전자 노동자 경찰 조사 참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자문회의
-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회의
- 학교비정규직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 미팅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관련 청소년단체 기상청 활동가 미팅
- 일본 비정규직법 세미나

성소수자*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체회의 · 전북학생인권조례 수정안 규탄성명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획신청 WPATH 의견서 제출
- SOGI 법정책연구회 회의
-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회의 및 워크숍
- 가족구성원연구모임 회의

국제인권*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집행부 회의
- 해외한국기업감시 회의
- 해외한국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연구조사
- 한국 내 인권교육센터 연구조사 자문 (일본 휴라이츠오사카)

공익법 일반*

- 나눔기본법 제정안 복지부 간담회
- 기부금품모집법 개정 온라인모금단체 간담회

- 기부금품모집법 개정 대형모금단체 간담회
- 서울시 인권위원회 임시회 워크숍
- 시민사회공제회 추진연대 회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참석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 인권의학연구소 운영위원회 회의
- 천주교인권위 기획연대사업팀 회의

공익법 교육 · 중개*

- 전국 10개 법학전문대학원 겨울방학 실무수습
- 사법연수원 고등학생 법교육 '변호사와의 대화' 진행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클리닉 '성률저널' 인터뷰
- 대한변협 로펌 프로보노 간담회 참가
- 민변 실무수습 사법연수생 공감 방문

2 FEBRUARY

여성인권*

- 가족관계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간담회
-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 교수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관련 사건 항소심
- 인신매매 피해 태국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러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가사소송
- 미혼모 시설 활동가를 대상으로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쟁점 교육
- 한국성폭력상담소 쟁점 토론회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 인신매매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활동
- 진술조력인 시행령 입법예고안 검토를 위한 젠더폭력 피해장애인 사법절차참여권 연구회의
- 이주여성의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 회의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성매매방지팀 회의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

장애인권*

- 거주장애인 욕구조사 및 자립생활지원방안 연구
- 울산장애인권리보장조례제정 토론회 참석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회의
- 장애인법연구모임 회의
- 장애인 선거권소송팀 회의
- 시각장애인 볼라드(자동차 진입 방지봉) 손해배상청구 소송팀 회의

이주 · 난민*

- 위명여권 전력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자진출국 권고 사건 상담
- 버마인 S 난민불허처분취소 당사자 면담 및 항소장 제출
- 스리랑카인 I 난민불허처분취소 항소장각하 즉시항고 제출
- 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 촉구인권연대 회의 및 정진후, 서기호, 서영교, 유은혜 의원실 면담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 제도 개선 연구 모임
- 이주아동 권리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 미등록아동 나이지리아인 L 고교입학거부 관련 상담
-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 회의 및 커뮤니티 실무 교육 참가
- 동천 법무부 난민판례 연구용역 자문
- 유엔 난민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및 법무관 면담
- 열악한 기숙사 시설로 인한 이주노동자 살인사건 대응 면담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기획회의 및 관련 국제 협약 검토
-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허가제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 발제
-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회의

빈곤 · 복지*

- 입양제도개선 후속 대응을 위한 입양법 끝장토론 참석
- 입양 관련 인터뷰 'SBS, 궁금한 이야기Y'
- 입양 관련 인터뷰 'K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약계층노동*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장 및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개선 모임
- 택시기사 사납금 강요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선고
- 국가정보원 직원 성별에 따른 정년 차별 관련 공무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문제를 위한 한일 비교 토론회 토론
-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여
- 김춘진 의원실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간담회 참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숍 참여

성소수자*

- SOGI 법정책연구회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체회의
- LGBT 인권포럼,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퀴어가족법률상담소 '사연과 전쟁' 패널 참석
- 이반스쿨팀 워크숍 참여

국제인권*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동아시아 위원회 전화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국제인권구제절차 교육' 참가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가 프로그램 및 국제기금 활용 방안' 강의

공익법 일반*

- 국가정보원 직원, 소 제기를 이유로 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수사 관련 의견서 제출
- 전북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철회 및 전북교육청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대응활동
-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처우 관련 간담회 토론
- 기부금품연구모임 회의
- 서울시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진정자문
-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참여
- 베트남전쟁 납북자 A 국가배상 등 관련 상담
- 서울시 시민사회발전 민관 TF회의
- 시민사회공익활동가공제회 추진연대 활동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총회
- 민변 소수자인권위 회의
- 공장식축산 헌법소원 회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뉴스레터 '입양특례법 논쟁,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기고
- 대성고 신문 동아리 News '인권변호사' 관련 인터뷰
- 청소년동아리신문 WAVE '탈북자 인권' 관련 인터뷰

공익법 교육 · 중개*

- 로펌 프로보노 평가지표 연구
- 희망법 주최 공익인권법실무학교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의
-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연합 겨울캠프 '공익법률단체 소개' 참가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회 아시아 프로보노 세션 '한국의 사법접근권과 변호사의 공익 활동' 발표
- 한국청년연합(KYC) 대학생 인턴 공감 방문 소개
- 예금보험공사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생 대상 '공익법무의 이해' 강의
- 공감 월례포럼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개최
- 예비법조인 대상 제6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3 MARCH

여성인권*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활동
- 성폭력 가해 교수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변론
- 성폭력 2차 피해 관련 소송 항소심 변론
- 자립 미혼모 양육 자녀의 어린이집 화상 사건 자문
- 미혼모지원 시설 활동가 대상 개정 입양특례법의 쟁점 교육
-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낙태 규제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자문
- 태국여성에 대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사건 자문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고소 사건 의견서 제출

- 여성 · 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신규 종사자 교육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방지팀 회의(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구)
- 여성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인권*

- 지하철 장애인화장실 차별구제소송 변론
- 장애인식 개선 메뉴얼 자문회의
-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사례회의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회의
- 장애인법연구모임 회의
- 장애인등급제 폐지 토론회 참석
-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사자 토론회 토론

이주 · 난민*

- 나이지리아 출신 미등록 아동 고교진학거부, 탄자니아 출신 미등록 아동 초등학교 입학 거부사건 당사자 면담 및 교육청, 학교 협의
- 방글라데시인 M & 파키스탄인 K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 버마인 A 난민인정불허처분 이의신청서 및 정보공개신청서 제출
- 파키스탄인 M 가족 초청 비자거부 사례 당사자 면담
- 이주공동행동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추방 몽골인 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 촉구인권연대 회의 및 보호자 면담
-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 커뮤니티 실무교육 참가
- 고용허가제 지침 폐지 비대위 회의
- 난민네트워크 회의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한 워크숍 참여
-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관련 NGO TF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전문가 간담회 의견 발표, 법무부 주최 공청회 의견 발표

- 법무부 입법예고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난민네트워크)

빈곤 · 복지*

- 홈리스행동 파견사업 - 홈리스 법률상담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회의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회의
- 경범죄처벌법 대응회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문회의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취약계층노동*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시법 위반 사건 소송 변호
- 택시기사 사납금 강요를 이유로 한 손배소송 대리
- 국정원 정년차별 공무원지위 확인 소송 대리
- 서울돌봄사업단 자문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응 모임
-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 미팅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설명회 참여
- 요양공대위 법률자문회의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 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실용 노동법 강좌 교육
- 케이블 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발제
- 국가인권위원회 취약노동자 인권개선 정책 기획단 회의
- 김춘진 의원실 가사노동법안 관련 간담회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사회복지사 노동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심사 참여
- 케비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씨앤앰 및 티브로드 불법파견 관련 대응 자문
- 일본비정규직법 연구

성소수자*

- 성전환자 성별정정 기획신청
- 가족구성원 연구모임 회의
- SOGI 법정책연구회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 이반스쿨팀 워크숍

국제인권*

- 포스코 인도제철소 프로젝트 관련 기자회견, 산업통상자원부 면담 및 NGO 회의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회의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최종권고 대응 관련 단체 회의
-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방한 준비 단체 간담회, 실무진 회의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담당자 전화회의
- 해외한국기업감시네트워크 회의

공익법 일반*

- 위법한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을 위한 주민소송 변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문 및 세미나
- 서울시 공익사업 선정 심사 회의
- 공권력피해자 지원법 회의
- 서울시 시민사회발전 민관 TF회의
- 인권 친화적 학교 너머 운동본부 전체 회의
- 기부금품연구모임 회의
- 시민사회공제회 추진연대 회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 참석
- 천주교인권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 민변 소수자 인권위 회의
- 입양관련 단체 모임
- 덴마크 국영방송 인터뷰 '한국의 입양제도에 대하여'

공익법 교육 · 중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 세계한인변호사회 글로벌 법조인과 함께 하는 멘토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참가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간담회
- 광주과학기술원(GIST) 특별교양강좌 강연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준비회의
- 민변 인턴 대상 공감 소개

4 APRIL

여성인권*

-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에 대한 추완항소 사건 상담
-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 형사사건의 상담
- 결혼이주여성 출산국 공무원 대상 결혼이주 관련 한국법 교육

- 성폭력 가해 교수 상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변론
- 이주여성안전연대 주최 이주여성활동가 워크숍 발제

- 파주성폭력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예방 전문가 과정 교육
- 부천 여성의 전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탁틴내일 월례포럼 '성폭력 관련 법 개정의 쟁점' 강연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연구 지원 신청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방지팀 회의 참석
- '성착취 반대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 작업 참여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팀 배우자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의견 제출

장애인권*

- 볼라드(자동차 진입 방지봉) 제도개선 진정서 작성
- 장애인시설 입소금 사기 사건 검토
- 최동익 의원실 주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토론회 토론

- KBS 3 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장애인 차별금지법 5주년 특집방송 출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파견활동 및 공익소송팀 회의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회의
- 정신보건교육 자문회의
- 장애인 권리 옹호 TF회의
- 장애인법 연구회 창립총회
- 태아보험 가입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관련 자문

이주 · 난민*

- 국회인권포럼, 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등 공동주최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회의 및 법안 성안 작업
- 나이지리아 출신 미등록 아동 고교 진학거부 소송 관련 인터뷰
- 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회의

빈곤 · 복지*

- 홈리스행동 파견 - 홈리스 법률상담
- 홈리스행동 운영위원회 회의
- 대포차 명의도용 피해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지원신청
-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주거시설 등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검토 및 의견 작성
- 주거권운동 네트워크 회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상담원 대상 법률교육

취약계층노동*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시법 위반 사건 소송 변호
-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률 자문
- 서울 돌봄사업단 법률 자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모임 및 법안 개정 작업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요양보호사 관련
- 서울대 시설노조 조합원 상담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총회 참석
-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국정원 여성 정년차별 행정소송 항소심 진행
-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발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숍
-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법률 대응 회의
- 현장실습 대응 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공단조직화 정책팀 회의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돌봄연대 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기획단 회의

국제인권*

-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국제인권네트워크 공동주최 유엔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유엔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의의와 비준 필요성' 발표

-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방한 준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담당자 전화회의
- 해외한국기업감시 회의
- 국가인권위 해외한국기업인권침해실태조사 회의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 회의 및 워크숍
-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단 공감 방문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공익법 일반*

- 사할린한인 무국적자 국적 확인 소송 준비
- 조선적 재일동포 비자 발급 관련 법률 자문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법률자문
- 차별금지법안발의 철회 규탄 기자회견 참여
- 군형법 92조의6 개악안 철회요구 기자회견 참여
- 입양법 개정 작업 및 입양 정책 개선 작업
- 서울시 시민사회발전 민관 TF회의
- 공권력피해지원법 인권단체 간담회
- 시민사회활동가공제회법 추진위 회의
- 진선미 의원실 주최 기부금품법 토론회 발제
- 기부금품법 개정 관련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회의
-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회의
- 한국 인권옹호자 보고대회 준비모임
- 북한화교 Y 인신구제청구 및 심문기일 출석

공익법 교육 · 중개*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준비회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주최 '국내 및 국외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방안' 특강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공익변호사의 길' 특강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간담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간담회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 대한변협 사랑샘재단 회의

5 MAY

여성인권*

- 외국인전용업소 클럽주 대상 성매매 알선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발의
-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필리핀 여성 형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에 대한 추완항소
- 위장결혼 후 진정한 혼인관계 맺은 베트남 이주여성의 강제퇴거, 보호명령, 체류연장 불허에 대한 법적 대응
-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 형사사건의 상담
-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낙태 규제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자문
-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작업
- 제3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

-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가족관계등록법 자문 회의
- 교수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2차 피해 관련 소송 항소심 변론
- 이화여대 젠더법학 연구소, 한국젠더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성매매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 쟁점과 대안〉 토론

- '성착취 반대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방지팀 회의

장애인권*

-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준비
- 선관위 선거홍보방송 차별구제 소송 변론 준비
- 청각장애 아동 보험 소송 상고심 준비
- 지하철 차별구제소송 변론기일
- 장애인 웹 접근성 소송 준비서면 작성
- 부산 지하철 두실역 장애인 추락사고 사건 검토
- 양평군 토기장이 장애인 시설 대책회의
- 장애인 연구소 파견활동
-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회의
-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교육

이주 · 난민*

- 파키스탄 남성의 우즈베키스탄 체류가족 초청
- 예수회 법률교육
- 이주공동행동 회의
- 이주아동출생등록 연구조사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 버마인 R, 버마인 V 난민신청자 강제 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 대리
- 사할린동포문제 유엔기구 활용 관련 - 지구촌동포연대 자문
- 추방 몽골인학생 담임목사 면담
- 이주공동행동 주최 '구금난민 석방! 난민 생존권 보장!'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규탄 기자회견 참가
- 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회의 참가
- 추방 몽골인학생 관련 정진후 의원실 교육부 면담
- 이주정책포럼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분석' 발표
- 북한화교 Y 인신구제청구 사건 출국명령 유예 협의
- 이주아동권리보장법 회의
- 강제퇴거대상 피보호 몽골 대학생 U 면담
- 대한변협 인권위 이주인권소위 회의 참가
- 버마인 K, 버마인 R, 버마인 V, 버마인 M, 스리랑카인 I 난민신청자 면담
- 파키스탄인 K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취지정 정서 제출
- 난민네트워크 회의
-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 커뮤니티 실무교육 참가
- 이민법학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난민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

빈곤 · 복지*

- 노인학대 가해자 구상권 청구 소송 대리
- 홈리스행동 파견 - 홈리스 법률상담
-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지원
- 홈리스행동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취약계층노동*

- 국정원 여성직원 공무원지위확인청구사건 항소심
- 택시기사 사납금 강요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 요양보호사 노동권 관련 매주 법률상담

성소수자*

- SOGI 법정책연구회 LGBTI 사회적욕구조사 중간보고 워크숍
- 파키스탄 동성애자 난민인정신청 지원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회의

국제인권*

- 김기연 Forum Asia 사무총장대행 면담
- Charlie Clements 케네디스쿨 인권센터 소장 면담
-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준비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회의
-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및 국제인권네트워크 주최 유엔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기자회견 참가
-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의 의미' 발표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회의
-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방한 준비 실무진 회의 및 NGO 실무진 간담회 참가
- 참여연대 복지동향 '유엔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의의와 비준 필요성' 기고

공익법 일반*

- 위법한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을 위한 주민소송 대리
- 사할린 한인 무국적자 국적 확인 소송 대리
- 진주의료원 환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검토회의
- 북한화교 Y 인신구제청구 출국명령 유예 협의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법률자문
- 아름다운커피 법인 설립 자문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 회의
-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회의
-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사업 계획 모임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참가 및 총회 준비모임 참가
-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회의

- 법무부 인권국 주최 국가인권정책기본법안 관련 간담회

공익법 교육 · 중개*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특강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특강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기획특강 '의뢰인 상담기술' 강연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소송' 특강
- 민변 여성위원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 공감 월례포럼
- 사법연수원 43기 파랑기금 자문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 멘토링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및 티움 주최 국제인권 강의

6 JUNE

여성인권*

-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에 대한 추완 항고 대리
-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 형사사건 지원 - 피해자 법정 증인신문에 신뢰관계 있는 자로 동석
- 교수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2차 피해 관련 소송 항소심 변론
-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법 국회 여성가족상임위원회 주최 공청회 의견 진술
- 위장결혼 후 진정한 혼인관계 맺은 베트남 이주여성의 강제퇴거, 보호명령, 체류연장 불허에 대한 법적 대응
- 다문화자조모임 대상 다문화 관련 법 교육
- 2013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성매매의 법적 조명' 강의
- 성폭력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교육
-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회의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성매매방지팀 회의
- 이주여성 안전연대 TF회의

장애인권*

-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청각장애 아동 보험 소송 상고심 상고이유서 제출
- 장애인 지하철 편의시설 차별구제소송 조정기일 참석
- 장애인 웹 접근성 소송 준비서면 작성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파견활동
-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회의
- 장애우연구소 전북지소 대책회의
- 수화기본법 연구 자문회의
- 정신보건법 개정 대응회의

이주 · 난민*

- 버마인 S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 버마인 R, 버마인 V 난민신청자 강제 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대리
- 한국이민학회 2013년 상반기 학술대회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경위' 발표

- 이주정책포럼 '이민관련법 개관' 발표
- Global Asia Leadership Forum(GALF) '한국의 이주정책과 타자화' 강의
-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 회의 및 난민법률지원 커뮤니티 실무교육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강의
-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영남대 '인권과 실천' 원고 발표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및 중간보고서 작성
- 이주아동출생등록 연구조사
-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 회의
-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 파견 법률활동
- 추방 몽골인학생 관련 정진후 의원실 면담
- 탈북자 K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특별대리인 선임 확인 면담
- 난민주간 특별토크콘서트 참가
- 난민네트워크 회의
- 대한변협 난민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간담회 참가
- 대한변협 인권위 이주인권소위 회의
-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MOU 체결
- 국가인권위 방문조사전문가회의

빈곤 · 복지*

- 홈리스행동 파견 - 홈리스 법률상담
-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 주거권운동 네트워크 회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자문회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자문회의
- 서울시 복지법률지원단 자문회의

취약계층노동*

- 택시기사 사납금 강요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변론기일 출석
- 요양보호사 노동권 관련 매주 법률상담
-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자문위원단 기획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기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숍 참여
- '다시 쓰는 노조법' 보고서 작성
- 공단조직화 정책 모임 세미나
- 케이블방송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개선 토론회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기획단 회의
-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집회 강연

성소수자*

- SOGI 법정책연구회 LGBTI 사회적욕구조사 중간보고 워크숍 참여
- SOGI 법정책연구회 주최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 -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 파키스탄 동성애자 난민인정신청 지원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 군형법 네트워크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 운동
-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모교에 편지 보내기' 프로젝트 진행
- 무지개행동 주한러시아대사관 '러시아 정부의 성소수자 처벌 규탄 및 러시아 성소수자 지지 연대' 기자회견 참가

국제인권*

-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국내난민시스템' 패널

'한국난민시스템' 발표
- 국제구금연합(IDC) 회의
- 남반구 난민법률지원 네트워크(SRLAN) 회의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회의
- 유엔난민기구 주최 전략소송 라운드테이블 참가
- 주제네바 태국 대표부 방문 면담
- 주제네바 대만 대표부 방문 면담
- 서울변회 국제위원회 아시아소위원회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회의
-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NGO 간담회 참가
-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울산, 밀양 현장방문 동행
-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기자회견
- 지구촌동포연대 상담 (사할린한인 관련 유엔절차 활용)
- 민변 국제연대위 회의
- 국가인권위 해외한국기업인권침해실태조사 연구용역 회의
- 해외한국기업감시 회의
- 기업과 인권 공부모임

공익법 일반*
- 위법한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을 위한 주민소송 변론
- 재한동포 주민등록 거부 대응 회의
- 입양정책개선 : 베이비박스 국가인권위진정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제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상담
-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회 회의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준비
- 민변 소수자인권위 회의
- 사회적 약자 변론권 보장을 위한 모임
- 서울시 시민사회활동가 공제회 조례제정 회의
-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 최종검토회의

공익법 교육 · 중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무실습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홈리스 법률상담 참여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특강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및 법조윤리 대담
- 공감 월례포럼 '경제위기 시기, 건강권 어떻게 지킬까?' 개최
- 법무법인 화우 공익 전담 변호사 자문

7~8 JULY~AUGUST

여성인권*
-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친권상실심판에 대한 추완 항소심 변론
- 성폭력 가해 교수 상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판결선고)
- 교수 성폭력 2차 피해 관련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 결혼 중개업자에 의한 필리핀 현지 성폭력 피해 사건 증인신문 준비를 위한 당사자 면담
-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원스톱센터 경찰 대상 개정 성폭력 관련 법제 강의
- 국가인권위원회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연구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작업을 위한 입양단체 및 미혼모 단체와의 법안 추진 간담회 참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가족의 미래와 가족관련법 준비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
-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자문위 회의
- 기지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위한 회의 및 세미나 참석
- 이주여성 안전연대 TF회의
- 이주여성 인권포럼 회의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의
- E-6(예술흥행)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월례회/성매매방지팀 회의 참석

장애인권*
- 장애인 웹 접근성 차별구제소송 변론
- 청각장애 아동 보험소송 보충이유서 제출
- 장애인 지하철 접근권 차별구제소송 변론
- 서울장애인부모회 법률교육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응'
- 서울권 정신보건기관 운영자 교육 '정신장애인 인권과 법'
- 장애우연구소 파견활동
- KBS 청주방송 '지적장애인 학대 및 강제입소' 인터뷰
- 장애인권리보장법 회의
- 정신보건법 개정 대응 회의
- 국제장애인자립생활 세미나 공동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미국 장애인자립지원센터 (RICV) 연대 회의
- 미국 장애인자립지원센터 (RICV) 대표 미팅
- KBS 3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기획좌담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회의
- 인권위 정신보건교재 집필회의
- 장애인법연구회 회의

이주 · 난민*
- 대한변협 인권위 이주인권소위 회의
- 이주정책포럼 회의
- 이주공동행동 집행위 회의
-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회의
-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법안 소위
- 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 회의
- 추방 몽골인학생 관련 정진후 의원실 및 법무부 실무자 면담
- 이민법학회 소모임
-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특별위 회의 및 교육
- 난민네트워크 회의
- 유엔난민기구 난민편람 번역감수 TF회의
- 버마인 R, 버마인 V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변론
- 파키스탄 기독교 여아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상고심 상고이유서 제출
- 대한변협 난민신청자 구금 토론회 토론
- 대법원 용역 '사법 통역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미나 토론
-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강연
-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 파견 법률 상담 및 위임장, 답변서 제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주노동자 형사절차 자문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한 4차 워크숍 진행

빈곤 · 복지*
-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 홈리스 행동 파견 - 홈리스 법률 상담
- 대출사기로 기소된 홈리스 명의도용 피해자 변호
- 위장결혼한 홈리스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대리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민중생활보장위원회 법률상담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2013년 주거권 워크숍 발표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회의

취약계층노동*
- 재택근로자 퇴직금 청구소송 변론
- 택시기사 사납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 국가정보원 정년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변론
-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와 조례안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기획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권고안 초안 작성 및 회의

성소수자*
- 동성애혐오 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 피해자 가족 면담

및 탄원서 모집 캠페인
- SOGI 법정책연구회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지 작업
- SOGI 법정책연구회 주최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참석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주최 2013년 연속기획 두번째 워크숍 〈가족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참석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체 회의
-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회의

국제인권*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Jeff Plantilla 동아시아 워킹그룹 의장 면담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보호감호 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 준비팀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유엔 특별진정팀 회의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회의
-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장애인권리협약 활동 국제법 전문가 자문회의 강의
- 한국인권재단 외 주최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본선심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워크숍 국제인권 발제(국제인권 개관, 표현의 자유, 이주민, ILO)
- 지구촌동포연대 면담 - 사할린 한인문제 유엔기구 활용 관련
- 해외한국기업감시 네트워크 회의
- 국가인권위 해외한국기업인권침해실태조사 연구용역 회의, 국가인권위 간담회 및 필리핀 실태조사

- 기업과 인권 공부모임
- 이목희 국회의원 주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
- 노환균 교수 - 한국 NCP 개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관련 면담
- 전쟁없는세상 주최 기업에 저항하는 법을 고민하는 반공개 워크숍 '기업관련 국제기준 및 시스템' 발표

공익법 일반*

- 학교인권너머운동본부 전체회의
- 긴급조치 재심사건 무죄선고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 해외입양인 미국인 A 중앙입양원 방문 동행
- 해외입양인 미국인 R 의뢰인 면담
- 세계한인변호사회 주최 해외입양인을 위한 법률핸드북 발간 및 기념대담 사회
- 겨울 풀시넷 - 관변단체 지원법령 관련 의견서 작성 및 상담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슈개발팀 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탈북자 국내정착과정 인권개선 TF회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회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아동인권개선연구팀 회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보호대상아동 보호 체계 세미나
- 인권의학연구소 운영위 회의
- 대한변협 교육위원회 워크숍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회의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기획연대사업팀 회의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회의
-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요건 관련 전문가간담회
- 시민사회단체 대상 기부금품법 개정안 설명회
- 안전행정부 기부금품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공익법 교육 · 중개*

-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공동주최

- 공익변호사 모임
- 공감 2013년 여름 인권법캠프 진행
- 7월 월례포럼 진행 '장애인 탈시설과 시설문제에 대한 대안'
- 동천 공익, 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발표대회 심사
- 사법연수원 하계 고등학생 법 교육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클리닉 국제인권 강의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 법조윤리(공익활동) 강의
- 명지대 자원봉사동아리 ERCTUS F.O.R과의 만남
- 국가인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생 대상 교육

9 SEPTEMBER

여성인권*

-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호인단 회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의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민변 여성위원회 빈곤과 여성노동팀 월례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진행
- 국제 이주기구 한국대표부 · 공익법센터 어필 · 김춘진 의원실 주최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 - 국제 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부분 토론

장애인권*

- 서해대학 장애인 진급차별구제소송 의뢰인 면담
- 장애인 지하철 접근권 차별 소송 화해 성립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손배 소송 조정 진행
- 대한항공 웹 접근성 소송 조정 성립
-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장애인 인권 강의
- 경찰박물관 직원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 도봉구 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자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권익옹호체계 자문회의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서 감수
- 장애인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교재 개발 그룹 인터뷰
- 장애우연구소 파견활동
- 장애인법연구회 세미나
- 장애인권리보장법 회의
- 한국장애인총연맹, RICV, 공감 회의

이주 · 난민*

- 버마인 R, 버마인 V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변론
- 이주노동자 단속 관련 국가배상 인정 판결 성명서 작성
- 서울행정법원 주최 학술대회 다문화, 국제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행정재판 토론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회의 법안 발제
-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 조사 보고서 완성
- 메디피스 김수희 간사 면담 - 국내 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조사 사업 자문 및 난민 소개
-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 파견법률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여수 출입국 보호소 방문조사
- 법무부 난민과 간담회
- 유엔난민기구 정례협력모임
- 유엔난민기구 난민편람 번역 TF회의

빈곤 · 복지*

-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패널 초청 '주거권과 강제퇴거금지법' 대담

취약계층노동*

- 택시기사 사납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
- 국정원 여성정년차별소송 상고장 제출
- 재택근로자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장 접수
-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관련 대한변협 명의 질의서 작성
- 자활센터등 정치활동, 종북성향 조사 관련 리서치 및 의견서 발송
- 서울시 요양 보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완성
- 서울여성노동자회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자문 및 회의
-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별 수당 차등 지급 관련 자문
- 서울시 직장암 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의
- 공단 조직화 정책팀 워크숍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모임
- 무급 조교 관련 EBS 인터뷰
- 청소년 호텔 알바 프로젝트 관련 미팅 및 인터뷰
- 해밀 공익위원회 회의
- 영어전문강사 계약기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에 관한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기획단 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쌍용차 대응 관련 집회 참여

성소수자*

- 동성애혐오 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 피해자 변론
- SOGI 법정책연구회 등 주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
-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모교편지보내기 캠페인
- 군형법 네트워크 회의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워크숍

-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회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의

국제인권*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법률지원워킹그룹 준비회의
- 글로벌파트너쉽센터 한미일 난민 프로젝트 NGO회의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무국적워킹그룹 회의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동아시아워킹그룹 회의
- 일본난민변호사네트워크 주최 한일변호사 난민법 세미나
- UNDP 주최 법의 지배와 포스트 - 2015 어젠더 회의
- 국제 인권네트워크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 삼성유엔진정팀 점검 회의 및 기자회견
- 해외한국기업감시 회의
- 국가인권위 해외한국기업인권침해실태조사 연구용역 필리핀 실태조사 회의
- 기업과 인권 공부모임

공익법 일반*

- 사할린 동포 국적확인 소송 변론
- '아름다운가게' 기부금품법 관련 자문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국정원 합동신문 TF회의 및 장하나 의원실 면담
-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뷰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슈개발팀 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회의
-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회의
- 공익변호사 모임 회의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 회의
- 인권 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회의 및 보고회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칼럼 기고 '기부의 자유를 허하라.'
- 공익활동가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서울시장 면담
-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공익법 교육 · 중개*

- 사법연수원 국제인권법 'NGO와 국제인권' 특강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5기 공익기금 설명회 강의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 클리닉 강의
- 연세대 국제인권동아리 엔라이트 강의

10 OCTOBER

여성인권*

- 인신매매 피해 태국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 항소이유서 제출
-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회의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진행
- 민변 여성위 빈곤과 여성노동팀 / 성매매방지팀 회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 제도 및 대책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 의견 제출

장애인권*

- 서해대학 장애인 진급차별구제소송 의뢰인 면담
- 인권위 정신보건기관 인권교재 집필자 미팅
-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기일
- 도봉구 장애인인권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장애인 학대사건 피해자 가족 면담
-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 교육
- 미국 국무부 주최 장애인단체 교환연수 프로그램 참가

이주 · 난민*

- 이주정책포럼 회의
- 이주연대포럼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인권소위 회의
-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회의 및 법안 수정보안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발간 및 토론회

- 추방 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활동 돌아보기 간담회
-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 지원 사건 변론
- 중국동포 출신 국적 취소 사건 당사자 면담
- 형사정책연구원 전문가 자문 인터뷰
- 난민네트워크 회의
- 유엔난민기구 난민편람 번역 TF회의
- 탈북자 지원 중국동포 난민불인정취소 소송 변론
- 버마인 R, 버마인 V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변론

빈곤 · 복지*

-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 홈리스 표적 불심검문 중단 및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취약계층노동*

- 재택근로자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장 접수
- 국정원 여성정년차별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항의서한 작성
- 비정규직 없는 세상 집시법 위반 소송 상고심 답변서 제출
- 택시기사 사납금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 서울직장맘지원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위촉식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영세사업장 조직화 관련 토론회 토론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기획단 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스마트워크와 간접고용' 관련 발제
-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사 직무연수 교육
- 영어회화 전문강사 집단 해고 대응 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성소수자*

- 파키스탄 동성애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변론
-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자살 손해배상 사건 변론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및 퀴어문화축제기획단과 대만 LGBTI 단체 탐방
- 동성결합소송 변호인단 회의 및 성소수자 단체 간담회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 및 전체회의 참석
- SOGI 법정책연구회 회의 및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진행

국제인권*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운영위 회의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회의
- 유엔인권이사회 UPR 대응 NGO 네트워크 사무국 회의
- 민변 국제연대위 보호감호 개인통보팀 회의
- 국제인권네트워크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간담회 준비모임
-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주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 본선심사 심사위원장 참가
- 해외한국기업감시 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회의 및 발표회
- 기업과 인권 공부모임

공익법 일반*

- 탈북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기일 특별대리인 출석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과정 인권 개선을 위한 TF회의 및 간담회 발제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회 및 전체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회의
-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회의
-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집필자 간담회 및 회의
- 보건복지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개정반대단체 간담회
-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준비위 정리모임
- 주한미국대사관 인권담당 면담

공익법 교육 · 중개*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지방자치법 특강 '소송대리인이 본 주민소송의 실제'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 클리닉 강의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 수업 '성소수자 인권' 특강
- 서원초등학교 인권 강의

11 NOVEMBER

여성인권*

- 인신매매 피해 태국여성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
- 낙태 기소 여성 공동변호인단 회의
-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대리인단 회의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진행
- 민변 여성위원회 빈곤노동팀 회의 -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1회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항목의 현실〉 주최 및 발표

장애인권*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조정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례회의
- 장애아동 학대건 항고 제기
- 국제자폐인 권리옹호 포럼 토론

- 장애인법연구회 운영위원회 회의
- 탈시설 정책위원회 회의
- 한양대 정신과 임직원 정신보건 인권교육
- 한국발달장애인연구소 소속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상 공감 활동 소개
- 장애인 월간지 '함께걸음' 장애인단체 교환연수기 기고
- 한국장애인인권상 심사

이주 · 난민*

- 이주노동자 식비 청구사건 변론
- 탈북자 지원 중국동포 난민불인정취소 소송 변론
- 버마인 V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보호명령 취소소송 승소
-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탈북난민신청자 P 영국법원 의견서 제출
- 한국에서의 인종차별 관련 당사자 면담
-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 참가
-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및 소송 당사자 버마인 K 면담
- 이자스민 의원 면담 및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입법 청원
- 형사정책연구원 전문가 자문 인터뷰
- 법원행정처 주최 외국인 사법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가
-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엄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현실' 발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종차별대응팀 간담회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주의 및 관련 불관용' 발표
- 대한변협 난민위원회 회의 및 커뮤니티 실무교육 참가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 피난처 등 주최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서울 라운드테이블 참가
- 난민지원시설 간담회 참여
- 난민네트워크 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인권소위원회 회의
- 난민법 시행에 따른 난민 여성과 아동 인권보장방안 토론회
- 유엔난민기구 난민편람 TF회의 참가
- 메디피스 주최 국내 난민 건강권 보장 사업 평가토론회 '난민법 제정까지와 그 이후' 발표 및 패널토의 사회
- 유엔난민기구 주최 난민 신청자를 위한 포괄적 지원과 그 기준 포럼 "난민법 상의 난민신청자 총괄지원 : 개선사항 및 어려움" 발표
-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토론
- 일본난민협회 Shiho Tanaka 공감 방문

빈곤 · 복지*

- 명의도용 피해 홈리스 사기 피고사건 변론
-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취약계층노동*

- 재택근로자 퇴직금 청구소송 변론
- 택시기사 사납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 국가정보원 정년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항소심 변론
-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와 조례안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기획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권고안 초안 작성 및 회의
- 한겨레신문 통상임금 관련 이메일 의견서 발송
- 청소년노동조합 준비 위원회 모임

성소수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청소년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발제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회의
- 동성결합소송 변호인단 회의
-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 변론
- 간성(Intersex) 성별정정 신청 사건 지원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국제인권*

- 한국산 최루탄 바레인 수출 관련 대응모임 참가
- 민변 국제연대위 보호감호 개인통보팀 보호감호 자유권규약 개인진정 관련 수감자 면회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아시아 구금 워크숍 및 동남아시아워킹그룹 참가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회의
- 해외한국기업감시 회의
- 포럼아시아, ESCR-Net 주최 기업과 인권포럼 '해외한국기업 감시활동',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상황에 관한 연구' 발표
- 숭실대 고당법률국제학술대회 '탈북자의 난민 지위' 발표

공익법 일반*

- 장래의 정보공개청구권 제한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기
- 민변 소수자인권위 회의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활동 연구모임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 변협 인권위원위 회의
- 서울변회 인권위 아동인권개선연구팀 회의

공익법 교육 · 중개*

- 서울대 공익인권 출판 기념 강연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 클리닉 강의
-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소고' 발표
- 공익변호사모임 회의

12 DECEMBER

여성인권*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진행
-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대리인단 회의

장애인권*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손해배상 조정 확정
-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헌법소원 제기 간담회 참여
- 장애인 공익소송 보고대회 주제발제
- 민변 인권보고서 장애인 분야 집필
- 장애등급제 폐지 광화문 농성 참여
- 법원의 성년후견심판에 관한 간담회 참여
- 장애우연구소 파견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시설 인권교재 최종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재 개정 작업
- 공공후견인 교육 · 지원 중앙센터 후견감독위원회 위원 위촉식 참석
- 장애인법연구회 송년모임 참가
- 한국장애인총연맹 장애인인권상 심사

이주 · 난민*

- 탈북자 지원 중국동포 난민불인정취소 소송 변론
- 버마인 R, 버마인 V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항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 활동 및 향후 발전 방안 모색 참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가족관계등록법 토론회 참가
- 유엔난민기구 정례모임
- 외노협 주최 인종차별 대응을 위한 토론회 참가
- 미국대사관 주최 인신매매 간담회
-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법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회의
- 난민네트워크 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인권위원회 회의

- 대한변협 - 공감 공동주최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교육 이주노동, 출입국, 국적, 영주권 판례 강의
-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의 회의, 커뮤니티 실무교육 수료식, 변호사단 결성식
- 탈북난민신청자 P 사건 영국법원 제출용 전문가 의견 수정
- 버마인 K 난민신청자 면담

빈곤 · 복지*

- 부양의무제 폐지 및 기초법 개악저지 여의도 농성 1인 시위 참가

취약계층노동*

- 재택근로자 퇴직금 청구소송 변론
- 택시기사 사납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 국가정보원 정년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변론
-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와 조례안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기획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권고안 초안 작성 및 회의
- 한겨레신문 통상임금 관련 이메일 의견서 발송
- 청소년노동조합 준비 위원회 모임

성소수자*

- 간성 성별정정 신청사건 지원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회의 및 김조광수 · 김승환 혼인신고 기자회견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주년 기념포럼 '레즈비언 가족의 법적 권리 찾기' 발표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회의
- SOGI 법정책연구회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체회의 및 이반스쿨팀 회의
- 동성결합소송 변호인단 회의
- 영화 〈친구사이?〉 승소기념 상영회 토크쇼 참가

국제인권*

- 한국산 최루탄 바레인 수출 관련 기자회견 'OECD 기업 가이드라인 및 대광화공에 대한 진정서 내용' 발언
- 서울대 인권센터 고문방지협약위원간담회 '국가폭력과 고문방지협약' 발표
- 대한변협 -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유엔인권권고 이행 점검 심포지엄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발표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회의
- 국제인권네트워크 회의
-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주최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간담회 참가
- 해외한국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수정보완
- OERD 후속보고서 NGO 보고서 기자회견문 작성
- 해외한국기업감시 회의
- 해외한국기업감시 주최 '글로벌 슈퍼갑 삼성을 말하다' 워크숍 참가
- 인권에기초한사법접근권아시아컨소시엄 운영위 회의
- 인권에기초한사법접근권아시아컨소시엄 사법접근권 입문 번역
- 민변 국제연대위 회의

공익법 일반*

- 사할린무국적자 국적확인 변론
- 조선족 여행증명서발급거부취소소송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설집 감수
-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발표회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의 문제점' 발표
-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회의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슈개발팀 회의
- 보건복지부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행 TF회의
-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찬반 간담회 토론
- 입양정책개선모임 회의
- 서울변회 인권위아동인권개선연구팀 회의
- 서울시 복지법률지원단 자문위 회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부산 사직대건성당 인권주일 강론
-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회 회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주일강론
- 민변 인권보고대회 참석

공익법 교육 · 중개*

- 로펌 공익담당변호사 모임
- 서울여대 사회문제론 수업 특강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 법조공익모임 '나우' 창립총회 참석

공감이 걸어온 길

2003

12월	염형국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근무 시작

2004

1월	정정훈, 소라미, 김영수 변호사 근무 시작
1.16	'공익변호사그룹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2월	김민경 간사 근무 시작 (~2005.5)
2월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준비위원회 변호사 파견
3월	제1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 (12개 공익단체)
8월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반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 활동)
11월	제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 (12개 공익단체)
12월	황필규 변호사 근무 시작
12월 (~현재)	버마 내 한국기업 인권감시활동 (현지 실태조사, 국제 세미나 개최, 미국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Human Rights clinic과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 제출 등)

2005

2월 (~12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 심의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현지(스위스 제네바) 활동
3월	윤정원 펠로우 근무 시작 (~2006.2)
3.21~ 4.7	전국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3.24	공감 인턴십 프로그램 시작
4월 ~ 12월	국제결혼중개구조 베트남 · 필리핀 현지조사 및 결혼중개업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5월	전영주 간사 근무 시작 (~2007.8)
7월	제3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진행 (13개 공익단체)
8월	송성수 펠로우 근무시작 (~2006.1)
11.2	법무법인 충정과 공익소송 업무협약 체결

2006

1월	자문위원단 구성 (15인)
2월	제4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 (11개 단체)
2.22	공감 2주년 기념 후원행사 '공감과 공감하기' 개최
4.19	37기 사법연수생 160명, 공익변호사기금에 기부약정
6.1 ~ 12.31	차별에 맞선 소송 - 이주노동자 차별적 제도, 관행에 대한 기획소송
6월 ~ 7월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 -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반대서명운동' 전개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6월	권회 간사 근무 시작 (~2009.6)
7.2	보험사의 장애아동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8월	제5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 (7개 단체)
9월	김미라 펠로우 근무 시작 (~2007.2)
9월	2006 주민참여가이드북 - 주민직접참여제도 실무매뉴얼 집필 (아름다운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 발간)
10.11 ~ 10.30	해외탐방 - 미국 공익법단체를 찾아서
10.13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10.21 ~ 10.30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참석 - NGO 반박보고서 제출
11월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률매뉴얼〉집필 및 법률교육 (대한변호사협회,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 발간)
12.1	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개선 부문 수상
12.7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12.3	정정훈 변호사, 제1회 무지개 인권상 수상

2007

1.11 ~ 8.20	황필규 변호사 - Unversity of Oxford Centre on Migration, Policy & Society 파견근무
2월	장서연 변호사 근무 시작
3월	희망변론 프로젝트 - 공익단체 법률지원 시작 (7개 단체)
5.7	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5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발간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공동기획)
7월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집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간)
6.22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산업연수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업연수생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6.26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08.11.15 대법원 확정 판결
7.5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와 파트너십 체결
7.21	지방자치단체 음식물 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광명 경실련 및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광명시민을 대리하여, 전 광명시장 등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을 상대로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
7.26 ~ 8.3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한국 정부 심의 회의 NGO 대표단 참석 - NGO의 반박보고서 제출
8월	전은미 간사 근무 시작
9.28	필리핀 가톨릭추기경 Gaudencio B. Cardinal Rosales 로부터 감사패 수상
10.23 ~ 11.22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12.10 (~현재)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연대활동
12.13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12.26	비닐하우스촌 수정마을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12월 (~2008. 10.)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관련 NGO 보고서 공동 제출 및 한국인권 상황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공동 제출

2008

1.14	법무법인 충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법무법인 충정에 연계해 로펌과 공익단체 간 직접적인 법률지원협약 체결 중개
2.14 ~ 2.16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3.1	차혜령 변호사 근무 시작
3.25	법조협회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4.11 (~12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점검 및 대응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 활동)
5.14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제토론회' 국가보고서 작업
5.16	공익법 활성화를 위한 로펌 프로보노 담당변호사 간담회 개최
5.17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공동 주최
6.2	법무부의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공동 활동)
7.14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서 작업
7.15	군대내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 항명죄 항소심변론에서 무죄판결 선고 (11.27 대법원 무죄확정판결)
8월	김윤경 펠로우 근무시작 (~2009.6)
9.3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10.15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승소 (주거기본권확보를위한동작공동대책위원회 공동활동)
10.21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다국적기업 국제 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발제
11.7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09

1.8	버마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1월 ~ 12월	용산 철거민참사 관련 활동
1.22	HIV 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확정
2.19 ~ 2.21	제2회 공감 인권법캠프 개최
4.2	이주 아동 ·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활동 시작
5.2	위법하게 지급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승소
5.25	공감 5주년 기념 세미나 '공익법 운동의 성과와 도전' 및 후원행사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 개최
6.25	안주영 간사 근무 시작
7.7	재생산권 침해 베트남 여성 민사소송 승소
9.23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발간
9.24	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승소
10.9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와 법률지원 협약
10.13 ~ 14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기획 및 진행
12.13	외국인 상점 출입국단속 국가배상 사건 승소
12.14	농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승소
12.17	「집회 · 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토론회 공동주최

2010

1.28 ~ 2.6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2.4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2.22 ~ 24	제3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3.9	신윤진 펠로우 근무 시작 (~2010.6)
4.19	박영아 변호사 근무 시작
6.1	윤지영 변호사 근무 시작
6.10	군형법 92조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
7.7	김정혜 펠로우 근무 시작
9.4	일가재단 '청년일가상' 수상
9.9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9.10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10.1 ~ 3	일본 변호사연합회 주최 한일외국인법제연구회 참가
10.14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
10.21	장애인 성폭력사건 쟁점 토론회 공동주관
11.2	버마 민주화 활동가 8인 난민신청처분취소 승소
11.26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이사 강요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결정
11.30	인신매매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
12.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12.30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감사패 수상

2011

1.25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1.27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14 ~ 16	제 4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2.24	청각장애인 교수, 대학 측의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무죄 판결
3.2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효력정지신청사건 인용판결
4월 ~ 6월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진행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공동 활동)
4.15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토론회 주최
4.20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사건 항소심 승소
4.29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 모색 : 해외한국기업 피해사례 증언' 워크숍 공동주최
5.19 ~ 8.30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1차~4차)' 주최
6.19 ~ 20	난민의 날 및 난민협약 60주년 기념 '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진행
6.23	베트남 노동자 파업 구속사건 변론 - 무죄 판결
6.29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08년부터 진행한 입양법 개정 운동의 결실
7.11 ~ 29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한국 정부 심의 회의 NGO 대표단 참석, NGO의 반박보고서 제출
8.27	제10회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제 에이즈 대회 발표
8.30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 토론회 주최
9.15	미셸 이주노조위원장 비자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체류연장불허처분 취소소송 변론
9.17	신옥미 간사 근무 시작
9.21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웃의 이사 강요 형사고소 대리 - 일부 유죄판결
10.1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 발제
10.13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10.18	광주 인화학교사건 해결과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
11.18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발제
11.18	중복장애 있는 여성 노숙인 방화사건 변호-일부무죄 판결
11.28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주최
12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 통과를 위한 성소수자 공동행동 점거시위 및 대응활동
12.10 ~ 11	'동아시아의 인신매매와 효과적 대책' 국제회의 발표
12.14	장서연 변호사, 제6회 무지개 인권상 수상

2012

1월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계속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 →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
2.23 ~ 25	제5회 공감 인권법캠프 개최
4.6 ~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 법 정책에 관한 커뮤니티, 연대, 학술연구 - '레인보우 라이징 심포지엄' 참여
4.19	청소년 노동 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4.23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6.18	공감이 제기한 군 의문사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원인이 된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기존의 판례 변경
7.25 ~ 26	공감 여름 인권법 캠프 개최
8.21 ~ 2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활동
9월	미신고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제기
9.25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1차 라운드테이블 개최
10.9	포스코 인도제철소 프로젝트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진정
11.2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2차 라운드테이블 개최
12.3	아름다운재단에서 분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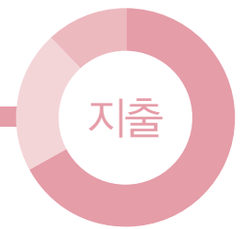
2013

1.2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행사 '아홉 살 공감, 새롭게 출발합니다' 개최
2월	김정혜, 나영정, 임자운 객원연구원 근무 시작
2.18 ~ 20	제6회 공감 인권법캠프 개최
2.26	제4회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개최
3월	'다시 현장으로!' -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사업 진행
3.11	공감 17기 자원활동가 활동 시작
3.11	김진 연구원 근무 시작
5.3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5.24, 7.5 연속 진행
6.11 ~ 13	2013년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참여
7.26 ~ 27	공감 여름 인권법 캠프 개최
8.7 ~ 16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실태조사
8.13	제5회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개최
9.9	공감 18기 자원활동가 활동 시작
10.10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12.13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2013 한눈에 보는 공감 살림 · 모금 통계

367,548,000	개인 기부 39.55%
133,780,000	로펌 기부 14.40%
40,909,000	프로젝트 4.40%
131,847,000	기업 및 단체 14.19%
15,561,000	이자 1.67%
239,583,000	기타 25.78%
929,228,000	합계

434,313,000	인건비 66.92%
135,357,000	사업비 20.86%
79,367,000	운영비 12.23%
649,037,000	합계



사업비	
교육 · 중개	16,904,000
연대단체 지원	459,000
법률교육	345,000
소송 지원	4,495,000
인권법캠프	19,763,000
월례포럼	2,974,000
연구조사	7,489,000
연구용역	40,909,000
기부자 지원	26,319,000
홍보	4,460,000
행사비	11,240,000
소계	135,357,000

운영비	
복리후생비	16,902,000
세금과공과	16,263,000
지급수수료	8,727,000
건물관리비	7,920,000
지급임차료	4,045,000
사무실유지비	25,510,000
소계	79,367,000

공감과 기부회원의 소중한 만남, 기부회원 인터뷰

2013년에도 공감은 열한 분의 기부회원님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1시간 남짓, 때로는 약속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진행된 소중한 만남을 통해 공감하는 마음과 나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갑니다. 귀한 시간과 이야기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송방주 님

저는 기부를 '부채의식'을 갖고 합니다. 제가 사회로부터 받아온 것들에 대한 빚을 갚는 거죠. 처음에는 노동자라든가, 힘없고 약하고 뺏기기만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기로 했어요. 공감의 기부회원이 된 후, 공감 소식지를 읽으면서 성 소수자도 알게 되었고, 이주민의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치는 힘, 차가운 법과 제도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공감이 가진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님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이는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떤 이는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나누면서 부족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특권을 가진 몇 사람만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요.

김영모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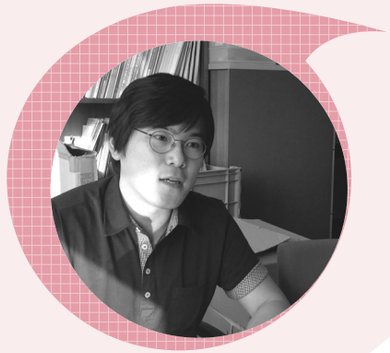
제가 '만원의 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부를 권하면 개인에게는 만원이지만 단체에서는 후원자 3명이 되는 거지요. 몇 년 후엔 증액할 수도 있고요. 저는 3만 원을 한 곳에 기부하는 것보다 만 원씩 세 곳에 나누어 기부하기를 권합니다. 소외된 약자와 인권 사각지대에 많은 분이 계십니다. 공감을 신뢰합니다. 저는 마음만 보낼 뿐입니다.

주식회사 히트콤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하는 일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음번에 옷을 뺏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이 하는 일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데 힘쓰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감하게 된 것 같아요.

서선영 님

<희망법>은 공감과 비슷하게 공익 전담 변호사 단체예요. 사실 처음 후원한 곳이 공감인데, 후원을 처음 시작하기가 어색해서 그렇지 후원을 하게 되면 점점 후원할 곳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공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지만 서로서로 후원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물론 공감과 <희망법>의 역할이 비슷하다고 해도 공감과 <희망법>이 다루는 주제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이런 단체가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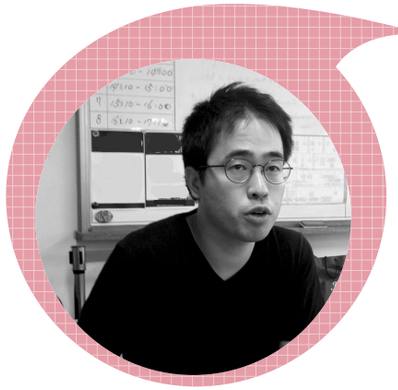


김동현 님

내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 하고 싶어요. 크고 깊은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많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정세진 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기 쉽잖아요. 관문 같은 걸 한 번 통과했다는 이유로 삶이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통과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영역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침 공감 변호사님들 만났을 때 그런 게 저한테 와 닿았던 부분인 거 같아요.



김재훈 님

아이들의 인생중에 저를 만나는 1년 만이라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큼은 불평등, 차별을 느끼지 않게끔 공정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한 아이라도 상처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아이를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만이라도 공평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충주비빔밥 개업기념 기부

소녀가장을 10년 넘게 지원하다보니까, 키울 놈들은 이제 다 커서 이제 어른이 됐어. 먼저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은 모자 가정과 소녀가장이었지. 그러다 도움이 될까, 기부를 시작했어. 다문화가정은 내 가슴에 닿는 게 많이 없던 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한 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속상하더라고. 나이지리아에 한국인이 애를 낳아 놓고, 싫다고 두고 온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온 거지. 소라미 변호사가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알아보는 와중에, 공감이 이런 일도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강지용 님

아이들의 폭력이 사실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사회적 폭력이 만연하는 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서 아이들의 폭력을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 어른들에게 배우고 되풀이한 것뿐이에요. 우리 아이가 살게 될 세상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다양성을 요구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가 서로 달라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요.

이종수 님

저는 법을 업(業)으로 삼고 있지만, 법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해당 전문가, 직업군 내의 전유물처럼 통용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연유한다고 봅니다. 소위 법률적 분쟁을 전제로 판사, 변호사 등이 자기들만 익히 연마했던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사용해서 법률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지요.

기부회원과 공감의 별나고 특별한 이야기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전해준 따뜻한 마음

(사) 한국사내변호사회는 기업이나 단체에 자체적으로 고용돼 있는 국내외 변호사들의 단체입니다. 매년 1월,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행사에서 기부티켓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모인 기부금이 공감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에는 매번 행사 때 마다 기부티켓이 등장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소중한 기부. 참 고맙습니다.

공감이 멀티로 2013년 기부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7일, 멀티로(Multi Law)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서 공감이 기부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멀티로는 1990년 창립되어 전 세계에 150여개의 로펌 및 8천명 이상의 법조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적인 로펌 네트워크로 2012년부터 매년 회원국 중 한 단체를 선정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Mark Lowndes 회장은 공감을 '취약계층의 공익인권을 본업으로 삼은 한국 최초의 NGO이며, 한국인권옹호활동의 선두에 서있다. 공감의 활동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부회원 행사 - 공익변호사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과의 소중한 만남

2013년 2월과 8월, 공감은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3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상황을 판단하는 냉철한 시각과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진로에 대한 궁금증들이 쉼 없이 공간을 채워갑니다. 지난 2월에는 22명, 8월에는 20명의 청소년이 참석하여 생각을 나누고 꿈을 격려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홈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안내]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기 후원신청]
✻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신용카드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메 일 : gonggam@gmail.com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초에 우편 발송되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201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2013년 공감에 힘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강건우	강경두	강기목	강기욱	강기탁	강대선	강명지	강문혁	강방권	강서영	강성원	강세라	강세희
강수정	강신섭	강신영	강신욱	강연성	강영규	강용현	강재상	강지영	강지용	강지현	강진영	강 찬
강태성	강태영	강현정	강효리	강희철	고나무	고병원	고상욱	고성민	고슬옹	고승정	고원형	고윤정
고은아	고정현	고찬욱	고태헌	고한나	공아영	곽명진	곽서윤	곽시은	곽우섭	곽원석	곽인찬	구나영
구송회	구윤복	구윤호	구인호	구태형	권기현	권기호	권미애	권방문	권보미	권선의	권영국	권영신
권영학	권오직	권오창	권용선	권용숙	권이선	권 일	권정순	권준율	권지희	권진영	권철옹	권태선
권택곤	권혜진	기지서	김갑돌	김 건	김경림	김경연	김경태	김광래	김광일	김교신	김구동	김구열
김국제	김권희	김균기	김기남	김기남	김기덕	김기수	김기식	김기온	김나연	김나윤	김난연	김남일
김남희	김다흰	김덕진	김도연	김도원	김도진	김도현	김동건	김동관	김동심	김동연	김동욱	김동율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훈	김락현	김루아	김 린	김명수	김명숙	김명원	김명준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선	김미연	김미연	김미정	김미진	김민경	김민경	김민관	김민석	김민영	김민욱	김민주
김범진	김병구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병필	김보경	김보영	김복기	김봉진	김사강	김상기	김상미
김상용	김상윤	김상은	김상준	김상헌	김상현	김서현	김석현	김성길	김성민	김성수	김성우	김성욱
김성환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성희	김세명	김수민	김수열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숙희
김순정	김슬기	김승현	김승현	김아름	김아영	김연주	김영모	김영민	김영수	김영옥	김영욱	김영은
김영주	김영철	김영태	김영훈	김예영	김예지	김용비	김우연	김우중	김욱진	김원섭	김원영	김원정
김원천	김유겸	김유라	김유민	김유성	김윤선	김윤정	김은숙	김은주	김은지	김이랑	김인균	김인석
김인숙	김인택	김일애	김자림	김재관	김재식	김재왕	김재원	김재원	김재훈	김정민	김정민	김정배
김정선	김정아	김정예	김정원	김정익	김정일	김정주	김정진	김정헌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조헌	김종보	김종욱	김종철	김종하	김종현	김종환	김종휘	김좌진	김주동	김주미	김주옥	김준석
김준식	김준연	김준혜	김지양	김지은	김지인	김지향	김지혜	김지효	김지훈	김 진	김진석	김진숙
김진영	김진영	김진옥	김진욱	김진환	김창환	김채환	김철민	김청송	김춘수	김태연	김태현	김태현
김택용	김포그니	김하림	김한석	김항중	김해성	김해정	김행곤	김현경	김현경	김현대	김현미	김현수
김현아	김현영	김현영	김현우	김현임	김현정	김현정	김형동	김형로	김혜란	김혜승	김혜영	김혜인
김혜주	김호철	김홍식	김홍율	김화랑	김효권	김효민	김효진	김희경	김희경	김희연	김희정	김희철
나승철	나영인	나윤호	나현채	남경호	남궁솔	남기국	남기연	남병영	남연진	남윤미	남직수	남화진
남효영	노귀선	노승진	노영주	노윤선	노현웅	노혜신	도재형	두레방	류민희	류선호	류신환	류정선
류제성	류준세	류철민	류향렬	류현진	류혜정	마석우	마 순	맹남주	명노창기타공방		명종진	명훈주
목영준	문경민	문경순	문규환	문미란	문성원	문승권	문유민	문윤경	문준영	문지용	문지은	문혜영
민경호	민경홍	민동섭	민명기	민선영	민유진	민한기	민형기	박가현	박갑주	박경석	박경웅	박경주
박경철	박계용	박광선	박규도	박규림	박 근	박금주	박기례	박기민	박기출	박노민	박노엘	박다혜
박대협	박도준	박동건	박래형	박명희	박미선	박병한	박상배	박서진	박선미	박선민	박선옥	박성구
박성혜	박세웅	박세진	박세희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수찬	박숙경	박숙란	박순덕	박순성	박순주
박신서	박신애	박신애	박신영	박아롱	박연주	박영란	박영선	박영수	박용대	박용식	박우진	박원종
박유현	박윤태	박은경	박은경	박은미	박은영	박은영	박은주	박은진	박은하	박이정	박인석	박장혁
박재성	박재형	박정교	박정명	박정민	박제성	박종욱	박종혁	박주민	박주연	박주희	박준석	박준영
박지선	박지연	박지원	박지현	박지혜	박지혜	박지호	박지환	박진석	박진영	박진호	박찬종	박채리
박철완	박철환	박춘희	박태현	박평아	박학수	박현규	박현규	박현서	박현수	박현우	박혜경	박호근
박호황	박화숙	박희철	반미영	방경희	방서은	방선영	방주현	배경헌	배민신	배삼희	배영근	배영희
배의철	배주언	배진성	배채영	배한익	배현아	백경미	백나라	백명주	백미란	백 민	백봉협	백성진
백승영	백신옥	백우철	백인욱	백일하	백종근	백지예	백혜경	변수양	부지환	부티미	서기준	서동운
서미애	서범욱	서상범	서선영	서순아	서영지	서은석	서정희	서종현	서지화	서진환	서창옥	서창효
서희원	석근배	석혜선	선우아정	선정규	선혜숙	설창일	성갑선	성계숙	성기옥	성원제	성유학	성정모
성창근	성창익	소민호	소은역	소재욱	소지민	손동인	손봉기	손승민	손승빈	손승현	손태호	손학렬
송경화	송나은	송명훈	송민수	송민주	송방주	송상교	송성수	송순성	송시엽	송아람	송의용	송인혁
송인호	송주연	송준현	송지현	송치영	송태협	송하경	신가영	신건호	신경숙	신대희	신동석	신미경
신민경	신상민	신수경	신용원	신원기	신윤진	신으뜸	신은섬	신은숙	신종균	신주헌	신진호	신진화
신창용	신채흔	신하윤	신혜성	신혜정	신효숙	신훈민	심지영	심해용	심혜섭	안경환	안명주	안병국
안상일	안선주	안소연	안시헌	안영진	안영춘	안영환	안은지	안이수	안인걸	안종수	안태진	안한진
양가을	양동석	양동욱	양선미	양승미	양옥수	양인수	양인숙	양지원	양창영	양철호	양현아	양홍석
양희준	엄수연	여광수	여영학	여효성	연제헌	염경용	염규상	염도원	염신연	염신희	염지원	염지희
염철	염형국	오미래	오미현	오병두	오상조	오상현	오성열	오성택	오수정	오승민	오유미	오윤식
오응철	오재동	오재림	오재창	오주연	오지원	오지은	오진숙	오충진	오현석	오현종	오형석	오혜인

오희영	옥인환	왕정희	왕호습	용경미	용성진	우 람	우람찬	우은주	우정열	우현경	원민경	원종열
위은진	유금녀	유록수	유성애	유신우	유영일	유용호	유 욱	유유연	유재광	유재철	유 정	유정인
유정화	유정훈	유지현	유진숙	유혜정	육은석	육태순	윤 경	윤규상	윤규성	윤덕찬	윤민화	윤상호
윤성운	윤성훈	윤세민	윤세종	윤소정	윤승희	윤신승	윤영미	윤용녀	윤원근	윤은정	윤자영	윤재병
윤재실	윤재윤	윤재훈	윤정숙	윤정연	윤정원	윤정향	윤종식	윤지원	윤지효	윤진수	윤진호	윤현정
윤홍원	윤홍중	윤화영	은 탁	은현호	이가양	이가현	이강원	이경은	이경철	이경호	이계수	이교혜
이 구	이규부	이금화	이기연	이길란	이길재	이나래	이난영	이다영	이동렬	이동성	이동진	이동훈
이동희	이두진	이명신	이명익	이명주	이민순	이민영	이범준	이병래	이병민	이병주	이보람	이보향
이복자	이본영	이봉재	이봉준	이상국	이상도	이상률	이상명	이상미	이상봉	이상석	이상언	이상중
이상필	이상희	이서영	이서희	이선기	이선순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성진	이성희	이세라
이세리	이소아	이 송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현	이수형	이수희	이숙진	이숙현	이순성	이순자
이승한	이승한	이심가은	이언주	이에린	이연정	이연진	이영래	이영일	이영주	이영창	이영호	이예화
이용문	이우진	이우환	이유경	이유선	이유영	이유정	이윤구	이윤정	이윤정	이은나	이은숙	이은숙
이은실	이은열	이은영	이은영	이은일	이은주	이은지	이은희	이의석	이인영	이 일	이재림	이재숙
이재승	이재양	이재엽	이재욱	이재한	이재형	이정남	이정란	이정민	이정민	이정애	이정애	이정은
이정이	이정임	이정진	이정호	이정호	이정화	이정훈	이종미	이종수	이종숙	이종오	이종은	이종희
이주언	이주영	이주일	이주현	이준범	이준석	이준석	이준일	이중원	이지은	이지혜	이지환	이진숙
이진우	이진주	이찬진	이찬호	이창형	이채호	이철규	이총희	이치선	이탄희	이태상	이태영	이태호
이태훈	이한본	이한주	이현수	이현종	이현주	이형근	이형자	이혜온	이혜욱	이혜인	이혜진	이호중
이호철	이호철	이홍기	이홍철	이화섭	이화영	이황희	이효건	이효경	이효선	이희만	이희면	이희숙
이희숙	이희순	이희승	임경아	임남규	임대원	임문모	임미진	임선영	임세은	임소진	임수진	임수희
임승빈	임영미	임예지	임 용	임용규	임원범	임자운	임정덕	임중은	임지봉	임 진	임진홍	임창현
임채민	임통일	임혜연	장 건	장경욱	장달리	장도중	장명숙	장미정	장미희	장민환	장세명	장숙정
장승희	장영석	장 원	장유식	장윤호	장은경	장은영	장재영	장정환	장주영	장준규	장철익	장 품
장효정	장희진	전경태	전두수	전미영	전민식	전병규	전상배	전상윤	전성우	전소라	전아람	전영록
전용범	전원진	전은경	전인선	전일호	전정현	전지성	전지은	전태언	정경순	정경애	정계현	정관주
정광준	정광현	정규빈	정규헌	정낙식	정남순	정다은	정동현	정려정	정미화	정병민	정병삼	정병화
정서희	정선홍	정성윤	정성호	정성훈	정세진	정소연	정수정	정수정	정순열	정연욱	정연주	정영선
정영선	정용승	정원락	정윤후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은주	정인섭	정인영	정일용	정일호	정재욱
정재필	정정국	정정태	정정환	정정훈	정준학	정지선	정지웅	정지하	정진규	정창남	정 철	정해송
정행주	정현숙	정현철	정혜선	정혜승	정혜원	정혜진	정희경	정희경	조광희	조대연	조라정	조문성
조문숙	조민혜	조범석	조병규	조병준	조복희	조상균	조성숙	조성희	조수민	조수진	조숙현	조시현
조아라	조영국	조영언	조영옥	조예경	조용기	조용수	조용하	조은혜	조이여울	조인섭	조장천	조정숙
조정은	조정현	조정환	조주영	조찬연	조태미	조태진	조현복	조현용	조현주	조형석	조형순	조혜련
조혜인	조혜정	조혜주	조홍택	조효민	조흥식	조희경	주두수	주선하	주영옥	지 박	진갑현	진민정
차강진	차미령	차승주	차영록	차용선	차정숙	차지훈	차혜령	채금희	채만기	채성희	채희상	채희정
천경송	천만우	천정훈	최가영	최강욱	최건섭	최계영	최규선	최달옹	최명길	최문석	최미영	최민기
최병선	최서연	최서훈	최서희	최석균	최선주	최성규	최성보	최성일	최세현	최승철	최영규	최영동
최예지	최용범	최용직	최용혁	최 유	최유신	최유진	최윤경	최윤나	최윤석	최윤수	최은영	최익실
최인선	최재신	최재홍	최정규	최정윤	최정은	최정은	최정인	최정임	최정환	최종선	최종환	최준우
최지영	최지은	최지은	최지혜	최진영	최창민	최철기	최현오	최호정	최희정	최희태	추은지	추혜윤
표슬비	하상현	하성우	하승수	하정민	하종관	한경수	한계영	한기영	한누리민서	한민영	한보경	한상률
한상엽	한성민	한수경	한승석	한승수	한아름	한연규	한원횡	한이경	한중호	한지영	한창남	한창훈
한태윤	한화숙	한효성	한효은	함영선	함재현	허누리	허인회	허정집	허태정	현우영	홍경화	홍대운
홍두의	홍 민	홍성백	홍성진	홍세화	홍소연	홍수희	홍아현	홍영재	홍윤선	홍은기	홍종남	홍주환
홍지은	홍초롱	화 목	황가혜	황경모	황규인	황영명	황용기	황원규	황의중	황의홍	황인이	황종희
황지현	황진희	황채주	황치옥	황필규	황해광	황 현	황현정	황혜진	황호경	황호연		

작은정성 / 감사합니다 무명 / Ogawa Kyoko / Tetsuo Yamashita / Donation / 16기 자원활동가 / 사법연수원44기 / 인권법학회
법조공익모임 / 세계한인변호사회모금 / 충주비빔밥 / 대사순풍한의원 / 목동순풍한의원 / (재)한국인권재단 / (주)미래에너지
(주)사이로직 / (주)센티널테크놀로지 / (주)팬택씨앤아이 / 용지건설진흥주식회사 / 주식회사 미래스타 / 주식회사 히트콤
경기복지시민연대 /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센터 / 다산인권센터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녹색연합 /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회 / 사랑샘재단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아름다운재단 / 인권연구소 '창' /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재단법인 동천 / 재단법인아름다운가게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지구촌동포연대 KIN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 참여연대 / 탈시설정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ESCR ASIA INC / Multi Law / UNHCR

박 영 아

시작할 수 있는 만큼의 용기, 나가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끈질김,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의 뒷심. 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한해였다.

소 라 미

나이 듦을 느끼는 요즘.
공감하는 '감응력'이 젊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슴 파르르 떠는, 코 시큰해지는, 눈시울 붉어지는
2014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 옥 미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 김남권 님의 시 중에서

안 주 영

올해도. Adagio non Molto

염 형 국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착취 당하지 않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삶이고 싶다.

윤 지 영

걷고 걷고 또 걷는다.

장 서 연

공감과 함께한지 어느 덧 7년. 내가 서 있는 자리, 함께 한 사람들을 돌아본다.
고통, 슬픔을 나누어 지는 것이 두려워 거리를 두고 도망다니지 않았나 반성한다.

전 은 미

서로 힘이 되어주는, 함께 하는 모든 인연이 참 고맙습니다.

차 혜 령

열심히 살자! ☺

황 필 규

증오, 혐오, 그리고 낙인의 힘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한다.
똑같이 되는 것은 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잃는 것이다.
사랑, 슬픔, 분노 그리고 평정심에서 희망을 본다. 항상 출발점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 연간보고서

발행일
2014년 3월

발행인
안경환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편 집
안주영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